

116 철학연구회 98년 춘계 학술 발표회

첫째, 방송국들은 서로 경쟁하는 이해관계에 있으며 또한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전문 직업적, 그리고 매체 미학적 관점들이 결코 빈틈없이 통합될 수는 없다.

둘째, 대중매체는 보통의 경우 그들에게 위임된 저널리스트적인 사명에서부터 생기는 책무를 아무런 갈등없이 회피할 수 없다.

셋째, 방송국들이 오로지, 또는 주로 대중문화의 수준에만 부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그것들이 통속 오락의 진부한 형태를 취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른바 '통속적 보복으로서의 통속적 문화'가 그것이다.

넷째, 이데올로기적인 메시지는 그것이 의도하는 의미가 어떤 특정한 하위 문화의 배경에서 나오는 수용조건 하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전도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신자를 놓치게 된다.

다섯째, 의사소통적인 일상적 프락시스가 갖는 고유의 고집이 대중매체의 직접적, 조작적 간섭에 대해 저항한다.

여섯째, 비록 '비디오 다원주의'와 '텔레비전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선은 무정부주의적인 영상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전자 매체의 기술적 발전이 반드시 네트워크를 중앙 집중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³¹⁾

즉 공론영역은 대중매체 독점체들과 사회적 권력집단들에 의한 의식적 조작과 무의식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면적으로 장악되거나 조종되지 않는다. 이러한 권력조작적, 이데올로기적 통제에 맞서 의사소통구조에 내재된 '의사소통적 이성'의 저항력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공중과 정치조직들이 기존의 공론영역을 정치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대중매체에 내재된 의사소통적 이성의 해방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의 실현 정도는 경험적인 문제로서 이는 곧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현 능력의 문제이다.³²⁾ 하버마스의 양면성 테제에 의하면 뉴미디어를 매개로 한 정보화 역시 화폐와 권력을 조정매체로 하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과정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생활세계의 요구를 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권력' 형성의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는다. 이는 뉴미디어의 양면적 속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하버마스는 텔레데모크라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면적인 입장을 갖는다.

하버마스는 정보유통의 세계적 네트워크화가 두가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31) 하버마스 1981, S.574-575. 비디오 다원주의와 텔레비전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크리스토퍼 아티튼 『텔레데모크라시』 한백 연구재단 편역, 거름, 1994 참조.

32) 하버마스는 초기에 직접적, 참여적 민주주의의 입장이 규범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체계 복잡성이 더욱 증대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면서 대의적 민주주의와 참여적 민주주의의 매개를 대중매체, 전자매체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시키려는 입장에 접근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Peters "Distrust of representation: Habermas on the public sphere" in, *Media, Culture and Society*. Vol. 15(1993) 와 크리스토퍼 아티튼 『텔레데모크라시』 참조.

본다. 즉 "공적 의식의 파편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적실성을 가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영역)의 성장을 촉진 할 수도 있다"³³⁾고 본다.

하버마스는 대중매체의 양면성 문제 그리고 공론영역의 양면적 성격을 전자.대중매체가 가질 수 있는 양면성에 의존해서 평가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영역의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운동의 논의를 확산시키고 법과 윤리, 정치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으며 철학과 사회과학의 상호보완을 강조한다. 비록 현실적으로 정치적, 문화적 공론영역이 자본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 압도당한다 하더라도 **당위와 목표로서의 이상적 공론영역에 대한 요구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날 현실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지구사회의 중심 패러다임으로 확장되어가고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하버마스는 단순히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확장보다는 의사소통적 행위와 연관된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점에서 미래학자들의 단순한 긍정적 기술적 유토피아론(전자민주주의의 실현, 사이버 아고라)이나 정치경제학적 입장의 이론가나 문화산업론자들의 부정적 비판주의적 전망보다는 경험적, 현실적인 정치적 핵심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풍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포스트모던적 정보사회이론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6. 정보화와 한국사회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정보화론의 입장은 대체로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낙관론적이고 기술주의적인 입장으로 정보화를 새로운 문명의 도래로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사회구조 및 시스템의 전폭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보사회론 또는 디지털 혁명론이다. 이 입장은 언론의 '정보 유토피아론'(컴퓨터피아)과 합쳐져 정보화 열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첫째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정부정책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정보화를 경쟁력·생산력 강화책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정보화는... 기업과 개인의 활동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고 국경없는 세계 단일 경제권 시대에 승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세계화의 핵심과제"라고 정보통신부는 1996년 '세계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방향'에서 밝혔다.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담론이 정보산업의 이윤추구와 함께 광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정보화에 내재해 있는 권력과 자본의 독점과 통제의 강화라는 측면을 중시해서, 정보에 대한 평등하며 통제받지 않는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새로운 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진보적 정보화 운동의 흐름이다.³⁴⁾ 이 흐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데 이 입장

33) 하버마스/한상진 편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나남출판, 1996, 124쪽

34) 최근에 참세상, 정보연대, SING, 통신연대 등 진보적 통신운동 단체들이 진보네트워크

내부에도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서구에서의 비판적 입장의 되풀이나 추상적 수준에서의 비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합한 보다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구사회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참고하되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³⁵⁾

오늘의 한국사회는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 그리고 탈근대적 요소가 공존하는데, 이들은 상호충돌하면서도 또한 보완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우리는 앞장에서의 논의들을 토대로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입장,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민족국가적 입장과 포스트모던 입장 그리고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적 입장을 종합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사회론적 접근 시각을 모색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쉐러의 정치경제학적 정보사회론의 분석들은 자본주의적 세계체제가 강화되는 오늘날 자본의 운동과 정보화의 과정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대해 낙관적인 정보사회론자들과 달리 정보화가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적 불평등 그리고 국가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은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최근 한국에서 IMF 체제의 도래에 의한 총체적 위기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국제금융 자본의 급속한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과의 정보격차 문제, 정보제국주의에 의한 기술적·문화적 종속의 문제, 정보화의 진척에 따른 도시화의 확산에 따른 전통적·주변부적 생활세계 파괴, 자연환경의 파괴의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기업(경제체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판과 관계없이 새로운 이윤의 원천으로서 세계적 경쟁체제에서 정보화 또는 정보산업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민족국가적 입장에서 기든스의 논의를 수용하여 한국에서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식민지를 거치고 분단국가로 형성되면서 상당히 왜곡된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쟁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정보화가 주로 국가권력의 감시의 필요에 의해 발전되었던 역사적 경험도 주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시민사회의 발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수동적이라고 생각한다. '문민정부'가 내세웠던 세계화와 정보화의 정책 구호가 IMF 체제로 귀결된 것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사회과학자들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35) 최근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보화와 관련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들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논의들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지만 철학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중요한 이론적 패러다임에 기초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문제제기를 해 보는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백육인 「인터넷과 정보고속도로-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계간 『경제와 사회』 1995. 가을(제 27호) 24-25쪽 참조. 같은 책의 유영준, 한상진, 박형준의 글 참조. 또한 '정보혁명과 문화혁명' 『한국사회와 언론』 1997, 제8호. 권기현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1997) 참조. 철학계에서는 최근 김상환의 『매체의 철학』 (나남출판, 1998)이 나왔다.

의 과제겠지만 어쨌든 근대국가 형성과 정보화의 관계는 한국사회의 경우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행정체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제와 조정을 위한 국가권력의 강화와 행정적 효율성의 필요 때문에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로의 발전이 불가피할 지 모른다.

한편 포스트에 의하면 전자매체의 네트워크 작동과 함께 주체가 이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주체의 구성양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포스트는 주체가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구조 속에서 구성된다는 테제를 탈구조주의로부터 취하는데 그 결과 자아는 끊임없는 불안정 속에서 탈중심화되고 분산되고 다중적인 것이 된다. 포스트의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젊은 층의 첨단적 소비문화와 의식, 생활양식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리오타르가 중요하게 제기한 상대주의 문제와 신실용주의적 관점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며 특히 최근 인문학의 위기와 대학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포스트와 리오타르의 이러한 분석들에 대해서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사회에서도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탈근대적 요소들이 경험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쉐러와 기든스의 근대주의적 입장, 그리고 포스트와 리오타르의 탈근대적 정보사회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버마스의 체계(경제·정치행정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와 공론영역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식민지의 경험을 거친 근대화과정에서 생활세계와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근대적, 근대적, 제국주의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근대적·부르주아적 공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공론영역의 확장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적 입장과 민중적 입장, 그리고 생태학적 입장 등의 다양한 사회운동이 정보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몇가지 이론을 적절히 절충한다 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정보가 어떤 종류의 이해관계를 가진 어떤 집단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목적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정보사회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이나 입장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에서 정보화를 바라볼 때 어떤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즉 자본주의적 기업의 입장, 또는 국가정책적 입장, 혹은 시민사회의 시민적 입장이나 민중적 입장 등에 따라 정보화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한국사회 같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면서도 경제, 정치, 문화, 생활세계가 불투명하게 엉켜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버마스는 자본과 권력이라는 현실적 시스템의 논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시민사회에서의 인간적, 이성적, 의사소통적 연대를 통한 공론영역의 확장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정보화의 진행이 자본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 주도된다 하더라도 권력을 보다 민주적인 권력으로 만들도록 자본의 논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전체의 민주화, 전자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뉴미디어를 새로운 정치참여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네트워크적 '공론영역'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적 민주적 역량이 있는 네티즌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인터넷 등의 컴퓨터 통신망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보서비스의 기본권 개념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마치 누구나 깨끗한 물과 전기를 싼값에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나 인터넷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빈자와 정보 부자의 격차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을 또 하나의 대중매체로 만드려는 갖가지 노력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정보화사회를 주도해 갈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운동일 것이다. 예컨대 각 동네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의 컴퓨터통신 서버를 공공기관이나 공공도서관 등에 설치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³⁶⁾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는 결국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기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사회, 사회와 국가, 국가와 국가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이고 추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추상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입장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도덕적 당위적 입장에서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사회철학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다면 사회철학자들은 시민사회적, 민주적 입장에 서야하지 않을까? 시민사회적, 민주적 입장에서 정보화를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보다 인간적인 생활세계적 가치일 것이며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보다 평등하며, 문화적으로 다양하면서도 풍요로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추구나 생각한다.

36) 김주환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사회와 언론』 1997, 제8호, p.68-69

<참고자료>

Frank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Routlage, London and New York, 1995, F. 웹스터/조동기 역 『정보사회이론』 사회비평사, 1997,
 데이비드 론펠트/홍석기 옮김 『정보지배사회가 오고 있다』 자작나무, 1997
 다니엘 벨/서규환역(1993) 『정보화 사회와 미래의 문화』 서울;디자인 하우스
 W.Russell Neuman(1991) *The Future of the Mass Audiance*, 전석호역 『뉴미디어와 사회변동』 나남출판, 1995
 마크 포스트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1994
 J. 스텔러브라스 「사이버 스페이스의 탐험」 『창작과 비평』 1996.봄
 장 프랑수와 료파르/이현복역(1992) 『포스트모던적 조건』 서광사
 크리스토퍼 아티튼 『텔레데모크라시』 한백연구재단 편역, 거름, 1994
 하버마스,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Darmstadt und Neuwied, 1962.
 하버마스,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2.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Frankfurt 1981
 하버마스,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1992,
 하버마스/한상진편,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나남출판, 1996
 니시카기 토오루 「인터넷의 미래와 공동체」 계간 『창작과 비평』 1996 가을호
 강상현 『정보통신혁명과 한국사회』 한나래, 1996
 권기현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1997
 김상환의 『매체의 철학』 나남출판, 1998
 김주환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사회와 언론』 1997, 제 8호
 *계간 『경제와 사회』 1995, 가을. 특집 '정보화 사회의 공간과 시민운동'
 *계간 『사상』 95. 가을호, 특집: 정보기술혁명과 정보사회
 *계간 『철학과 현실』 '정보화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허우성 "정보화 사회의 사이비성;불교적 비판"
 이기현 "정보화 사회와 매체의 스펙트럼"
 김혜련 "정보화 사회와 예술"
 김형철 "정보사회의 윤리"
 류승호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자아와 공동체」 『창작과 비평』 1997, 봄호, 창작과 비평사
 송재희, 신동윤, 박영주 『정보사회가 오면 난 어떻게 되지?』, 지식공작소
 이인규, 이희규 『멀티미디어로 가는 21세기』, 인폴리오, 1995.12
 이필렬의 "디지털 혁명과 정보 민주주의" 계간 『창작과 비평』 1996 가을호 특집 좌담
 임희섭 「정보화사회의 사회구조」, 최정호의 『정보화사회와 우리』, 소화, 1996

정재철 「뉴미디어 문화: 일상 생활 속의 근대와 탈근대」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 비평』 제 15호 1995. 5

정호근 「정보통신문명과 사회구조의 변동」 한국철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문화의 진보와 정보통신기술』, 1997

한국정보문화센터(1995) 『정보예술의 미래』

한국철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문화의 진보와 정보통신기술』, 1997.

정보사회의 정치변동

- '전자민주주의'의 명암

정 호 근 (목 포 대)

I. 현대정치와 정보사회에서의 정치

1.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통치 불가능성

민주정치는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기반한다는 생각은 원칙적으로는 시민이 정치의 결정과정에 참여함을 기본적으로 보는 견해의 현대적 표현이다. 어느 형태로든 참여의 이념은 민주주의에 적어도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그렇지만 현실·역사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일반화된 이후로 참여는 오히려 특수한 경우에 제한된 예외적 현상에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의 '이념'은 민주정치에 대한 일종의 '선형적 가상'이 되었다. 직접민주정치의 참여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작동한 직접민주정치는 실제로는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정치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가능했고 또한 여러 유보사항들을 가지고 있었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근대 그리고 근대 이후의 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정치이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에 기반하는 직접민주정치는 역사적으로는 정치장의 확대라는 시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도태되었고 현실성을 상실한 듯하거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의 여건 하에서는 그 실현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특히 다원적 사회로 접어들어 서구사회에서 대의제 정치체제는 경시할 수 없는 한계를 적지 않게 노출시킨다. 의회제도를 떠받치는 양당 내지 소수의 정당으로 이루어진 현대의 정당제도는 이념적 대립보다는 사회의 조정·통합능력이 요구되는 과제에 노출되거나, '급진화된 근대'¹⁾에 이르러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관심과 가치관을 충족시키기에는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역부족일 뿐 아니라, 또한 타협을 통해 도출된 정치적 결정은 만족한 사람들에 버금가는 만족하지 못한 사람을 낳기도 한다. 현대사회의 정치체제는 체계통합 유지의 압력과 공론을 통한 사회적 타협의 고려를 '조화'시키려는 가운데 - 특히 사회의 기본 이념이나 가치에 관련된 문제의 선택에 있어서는 더욱 더 - 많은 정치적 결정의 시간을 요구하여 때때로 정치체계의 효율성의 측면에

1) 필자는 다른 기회에 흔히 '탈근대'에 대해 '급진화된 근대' 혹은 '철거화된 근대'가 더 적절한 이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줄고, 「분화와 물화 - 긴장의 장으로서의 근대성」, 이명현 외, 『근대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 철학과 현실사 1998.

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고층' 끝에 성립된 정치적 결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되기도 한다.²⁾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통치불가능성'의 테제는 '민주적' 정치체제의 정당성의 위기로까지 고양될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볼 때 현재의 민주정치체제는 역설적인데, 그것은 한편 무기력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지나치게 강력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a) 그것이 무기력한 이유는 사회에서 제기되고 해결을 요하는 많은 문제들에 비해 볼 때 정치체제의 대응력이 실상 다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그들의 욕구나 요구가 다양하고 많은 만큼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인식되는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사회의 여타 체계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또한 그런 만큼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모든 기대를 정치체제에 거는데, 이 기대는 정치체제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기능에 비하면 사실은 '과도하게' 부과된 것이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만 조직화된 사회가 아니며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정치경제 및 여타 하부체계들과 마찬가지로 - 물론 아직 다른 하부체계들보다 다른 영역들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하부체계가 되었다. 현대사회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었으며 이 분화의 귀결은 상당히 급진적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정치가 다른 영역에 개입할 때, 그 다른 영역(A)은 자신의 준거 코드를 통해서 이에 반응하게 되므로, 정치는 이 코드를 의식하지 않고 그 영역에 개입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 개입이 예컨대 또 다른 영역(B)의 산출물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영역의 코드를 다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전과정에서도 정치는 또한 자신의 코드인 지배역할(支配役割)/반대역할의 코드를 도외시킬 수 없다. 이같은 정황에 의해 정치체제의 행위력과 문제해결력은 제한된다. 다른 한편, 대부분의 '선진화'된 서구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관심과 이익에 따라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세력도 절대적 다수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정당을 위시한 정치적 결사체가 형성되면 바람직할 듯이 여겨지지만 정치운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대중의 정치적 관심은 말하자면 이중적으로 여과된다. 다양한 관심들이 일정수의 정치적 집단들로 집결되는 가운데 일차의 여과가 일어난다. 다음으로 지배역할을 떠맡기 위해 이같은 상황에서 여러 정치적 단위들은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집단의 결합은 기본적으로 잠정적일 뿐 아니라 이질적인 이익접합이다. 잠정적인 이유는 사안에 따라 다른 접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며, 이질적인 이유는 한 사안에 관하여 비록 상이한 집단들 간에 접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접합이 전면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는 또 다른 집안들 간의 접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b)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결코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

2) 정당정치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에 대해서 단지 한 예로 P. Haungs, "Aktuelle Probleme der Parteiendemokratie", *Jahrbuch für Politik*, Halbband 1, 1992 참조.

은 정치적 결정이 '전체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월권적'인 것이다. '민'에 따른다'고 하는 민주주의는 역설적으로 언제나 만족에 버금가는 불만족을 수반하는 경우가 이미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식은 물론 상대적이다. 사회가 인간에 수렴된다고 하는 근대적 의식이 발달, 즉 '사람들이 사회를 만든다'는 의식이 의식됨으로서 이 역설이 발생한다. 그러나 늦어도 자본주의적 근대이후로 사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집합이 아닌 한편 제2의 자연이 됨으로서, 각 개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는 개인들의 행위영역을 벗어나 자체의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영역이고 개인은 그에 대해 무력감을 갖게 된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막상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역설에도 해당이 될 것이다.

서구의 현정치체제는 위 지적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 쉽지 않은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 서구적 유형의 민주정치체제는 앞서 지적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추구하고 있다. 근대 계몽의 기획을 거친 조건하에서 그리고 더구나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로 이 체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뚜렷한 '다른' 대안적 체제는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적인 배경에서 볼 때 이른바 전자민주주의³⁾는 곤경에 처한 민주정치체제에 대한 일단 하나의 대담하고 신선한 처방이고 비전을 간직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컴퓨터와 전자매체 그리고 통신네트워크가 결합된 발달 그리고 이것이 가져온 상황에 고무된 정치체제론이다. 본고에서는 전자민주주의의 특성을 - 그 현황과 기술적(技術的) 장치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⁴⁾ - 정치체제의 시공질서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정당성의 구조변동이란 측면에서 철학적으로 개념화해 본다.

2. 참여와 시민주권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는 아고라에 집결해서 국가의 사안에 관해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가진 시민의 범위내에서 수행된 체제였으며, 그것은 주지하듯이 여러 배제된 계층을 그 이면으로 한 체제이다. 그 후의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정치사회의 규모 때문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접민주주의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민주주의는 "새로운 아테네적 민주주의"의 부활을 선언한다. 지금까지 구체적 모델로 제시되고 당장 실현 가능할 수도 있

3) "정보화사회"가 과정적 개념이라면 "정보사회"는 특정 단계의 달성을 암시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정보화 이전 사회를 구분했던 용어들도 예외 없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구별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는 정보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보사회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발견적 개념'으로서 사회학적으로는 경험적으로 제시되는 기준, 지표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전자민주주의"도 예컨대 "원격민주주의", "컴퓨터민주주의", "사이버정치" 등 여러 개념들이 다소의 의미차이를 갖고 혼용되지만 본고에서는 의미상 각별히 부각될 필요가 없는 경우 일괄적으로 "전자민주주의" 개념을 사용한다.

4) 이에 대해서는 Ch. Arterton, 『텔레데모크라시』, 한백연구재단 편역, 거름 1994 참조.

을 전자민주주의는 예컨대 전화자동접수나 또는 단말기를 통한 투표 등에 국한되어 있는 듯하다. 이것도 물론 의사결정과정의 간편화를 통해 규모 때문에 제한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치영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한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정치과정의 변화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컴퓨터 단말기들의 확대 보급에 의한 전국적 나아가 세계적 정보통신망의 형성은 정보통신역량의 새로운 차원의 개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개인적·사회적 의사소통기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의사소통방식으로서의 정보통신망의 일반화에 의해 새로운 차원의 정치장이 형성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치체제의 변동을 유도할지도 모른다. 전자민주주의의 미래는 아직 열려진 차원이다.

정보화와 사회구조 변동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는 아직 논란이 많은 주제이며 그런 한에서 “정보사회”라는 표제어는 아직은 ‘발견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정보화가 정치체제에 구조적 변동을 유발한다면, “전자민주주의”는 새로운 정치엘리트세력의 등장, 정치조직의 재구조화 내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⁵⁾ (a) 좁은 의미로 전통적인 관료주의와 테크노크라시를 대체하는 조직 형태의 발달을 예상할 수 있거니와 “사이버크러시”라고 할 때 이것은 단지 정보통신망이 확산이 부가된 관료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테크노크라트에 대해 ‘인포크라트’ 또는 ‘사이버크라트’의 등장을 예상할 수 있다. 정치체계 외부의 정보제공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b) 넓은 의미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정부형태의 변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정보의 획득과 선택 그리고 조정을 원활히 하는 데는 하이어나키적 관료제도의 조직원리는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으며 유연하고 신속한 정보관리자들 간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헤테아르키적인 조직원리가 선호될 수 있다. (c) 무엇보다도 정보통신매체의 급격한 발달에 고무된 전자민주주의론은 이른바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촉발한 기술적 변환을 지금까지의 ‘대규모 정치’ 때문에, 요청은 되었으나 구현되지 못한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 계기로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현대적 조건 아래서도, 아니 바로 이 조건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전의 운송매체도 신체적 주관에 중심을 둔 생활세계에 근거한 시공간적 질서를 변화시켰지만, 현대의 정보통신매체야말로 ‘자연적’으로 주어진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기술된 현대 정치체제의 딜레마적 상황에서, 전자민주주의의 요구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가치는 충분하다.

5) 이에 대해 줄고, 『정보통신문명과 사회구조의 변동』, 한국철학회 편, 『기술문명에 대한 철학적 반성』, 철학과 현실사 1988 참조.

6) D. Ronfeldt, 『정보지배사회가 오고 있다』, 홍석기 옮김, 자작나무 1997, 3장 및 5장 참조.

3. 정치의 공간과 시간

매체가 시간과 공간의 질서를 개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매체는 정치적 시간차원과 공간차원을 재구조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 시공질서의 변동은 정치체제의 정당성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은 특히 공간적 원격을 극복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 정보통신매체는 이전에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의 정치공간에 집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의사를 표명하고 또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말하자면 가상공간에서의 아크로폴리스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전제하면 정치의 정보화는 정치적 장의 확장과 응축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국적 규모의 정치적 장이 형성되어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지역의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정보사회에서의 정치장의 확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다른 한편, 제한된 지역의 문제, 즉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세계에 직관된 사항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관심과 이익에 의해서 동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를 소지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예상할 수 있다는 데에서, 앞의 경우와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 현상은 정치장의 응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치체제의 활동의 정당성은 공간적으로는 가능한 한 넓은 지역의, 많은 수의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다. 사전(事前) 의사표명 및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에 따라 정치행위의 정당성은 고양되고, 다수의 지지를 받을수록 정치권력은 강화된다. 이 점에서 공론의 활성화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는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양 경우는 모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듯이 보인다.

정당성의 또 다른 차원은 시간이다. 정치체제의 시간차원은 정치적 행위의 시점과 행위의 정당화 시점 사이의 연장(延長)이다. 대의정치에서 정치적 행위의 -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 긴장은 시민의 (대의원) 선택의 시간(t)과 (대의원들의) 정치적 행위 결정의 시간(t')의 시간간극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시간차원에서 정치행위에 대한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는 (t'-t)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민의 의사와 정치행위 간의 간극을 좁힌다는 점에서 이상적이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정치비용(시간, 경비 등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대의제도에서는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은 형식적으로 다수 시민의 지지를 받은 대표자가 선출되고, 이 대표자는 일정기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형식적 절차에서 성립하므로, 대의제도는 이 시차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의회는 현재형인 데 반해서 의회에 반영된 국민의 의사는 과거형’인 것이다.⁷⁾ 대의제도와 비교해 볼 때 전자민주주의는 사실상 무엇

7) 武田文彦,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융합. 텔레데모크라시”: Ch. 아터튼, 『텔레데모크라시』, 한백연구재단 편역 (거름 1994)에 보론 2로 수록, 361쪽.

보다도 이 시차를 극소화하며 이 점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에 접근하는 측면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장의 확장이 가져오는 효과는 대중에게 요구되는 많은 정보량과 정보처리 시간의 증가에 의해 상대적으로 상쇄된다.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참여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동기를 광범위하게 가진 '정치적 인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인간을 그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무한히 부담 지울 수 있다는 근대 계몽주의적 인간관이 근저에 있다. 금세기에 들어 대중매체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계몽이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식의 사물화"이론에서부터 "계몽의 변증법"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좌절된 주객동일적 의식과 존재의 진단으로 제시된 것이 다름 아닌 문화산업론과 대중매체론이었다. 이로 인해 계몽의 기획은 혐의에 찬 눈총을 받게 된 것이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적으로 정치적 가능성으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정치의 시간차원의 축소도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 외에 정치조직 및 (정보)관료의 합리성과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식구조의 합리성이 전제되는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어서 "전자민주주의"라는 기획을 실현시킬 것이다.

II. 정보사회에서의 정당성의 구조변동

1. 전자통신망과 공론

전자민주주의의 정치론이 현재까지 제안하는 새로운 정치형태는 현대정치체계의 활동영역 가운데 극히 제한된 범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현재 사실상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전화나 컴퓨터 네트워킹을 통해 시민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주요 결정사항에 - 선거나 레퍼런덤을 통해 -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는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통신망의 급속한 확산과 정보통신매체의 사회적 도입은 새로운 공론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공론형성 기제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매체환경에 의한 공론의 특성은 어떠할까?

공론의 장은 개인들이 모여서 개방적 토론에 참여하는 영역이다. 사실상 전자통신매체의 네트워크는 무제한적인 공론에 기반하는 심의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할 수 있다. 이전의 매체에 대해서 전자통신매체의 연속성과 단절성은 어디에 있을까? 하버마스(J. Habermas)는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의사소통의 위험을 경계하고 있으나, 그의 의사소통이론은 원칙적으로는 전자통신망으로 구성된 의사소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도 읽힐 가능성이 많은 이론이다. 의사소통이론에 따르면 예컨대 인터넷 같은 전자통신망의 광범위한 구축은 민주적 공론의 형성 가능성을 촉진·조장하는 기제로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버마스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조정기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두

가지 종류의 매체를 구별한다.⁸⁾ 정치와 경제 등의 하부체계가 생활세계로부터 분화되는 "조절매체" (화폐와 권력)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의 일반화된 형식"인데, 이것은 언어적 상호이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적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세계의 맥락에 부착되어 있다. 대중매체는 시공적으로 멀리 떨어진 의사소통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시적으로 유지하고 또한 동시적인 주제로 성립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의 과정을 시공적으로 제한된 맥락의 지역성으로부터 풀어내 공론을 형성케 한다. 이 매체를 통한 공론의 형성은 가능한 의사소통의 지평을 넓히고 '자연적' 의사소통과 결부된 제한을 해제한다. 이 현상은 그러나 양면성을 띠는 과정이다. 대중매체가 중앙집중적인 망에서 의사소통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혹은 위로부터 아래로 수로화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사회적 통제의 효력을 현저하게 강화한다. 그렇지만 이 권위적인 잠재성만이 발현되지는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하버마스에 의하면 의사소통의 구조 자체에 해방적 잠재성의 반대증량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는 상호이해를 동시에 고양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하버마스식으로 보면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비판될 수 있는 효력주장들에 대해 취해야 할 입장표명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그는 조작가설 및 총체적 사물화가설에 대항할 수 있는 몇 가지 경험적 논거들을 열거한다.

하버마스가 대중매체의 양면성을 부각하는 것은 정보사회에 대해 대립된 일면적 견해들을 고려해 볼 때, 일단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적인 일상적 실천의 특성이 대중매체의 조작적 개입에 저항한다는 하버마스 자신의 고유한 논거이다.⁹⁾ 대중매체는 하버마스에게서는 "의사소통의 일반화된 형식"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의사소통을 집적하는 "의사소통의 강화기제"로 이해되고 이 점에서는 특히 인터넷은 공론장의 구축, 민주주의 촉진에 신기원을 열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상의 의사소통의 공동체는 몇 가지 제한이 가해진다면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상황"에 '현실적'으로 근접하는 모델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¹⁰⁾ 전자통신망의 장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치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상이한 매체양식과 그에 따라 주도적으로 형성되는 공론들의 성격차이부터 논의를 시작하자. 정보사회에서의 공론의 성격은 이전 시대의 의사소통양식이나 매체양식의 그것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중매체란 의사소통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량복제를 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사회적으로 설치된 장치를 말한

8) J.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M. 1985³, 제2권, 572쪽 이하.

9) 위의 책, 575쪽. 그렇지만 이 정황은 설득력을 더 가지려면 다른 논거들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III. 1. 참조.

10)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상의 "가상공동체"에서 '주체구성'의 탈집중성에 의한 새로운 정치적 담론의 경관에 대하여 M. Poster, "CyberDemocracy: Internet and the Public Sphere", http://www.humanities.uci.edu/~human/history/faculty/poster/poster_mark/writings/democ.html 참조.

다. 여기에는 인쇄를 통해서 제작되는 책, 잡지, 신문 등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진이나 전자적인 복제절차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방송도 포함된다. 이전의 음성이나 문자매체와 구별되는 이들 매체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정보를 담은 매체를 **불특정 수취인**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산출한다는 데 있다. 문자 자체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담지체로서의 생산물을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하나의 체계로서의 대중매체가 특징적으로 분화하게 유도하는 단서가 된다.¹¹⁾ 이로써 대중매체는 사회의 하나의 자율적 체계로서 자리잡게 되고 재생산된다. 이 지점부터 말하자면 매체는 **매체**로서 구조결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발신자와 수신자는 소수대 다수의 관계를 이루며, 소수의 정보를 다수인이 공유하게 되는 특성을 띤다. 그렇지만 발신자는 수신자에 비해 소수이기는 하나 발원지(發源地)가 하나는 아닌 만큼 대중매체와 더불어 동일적 공론의 가능성까지 함께 결정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거부할 중요한 논거들이 있다.¹²⁾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記述)은 물론 매체의 내적 형식이 주는 가능성에 주목한 확인이고 실제적으로 이같은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려면 매체 형식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정보과다와 정치적 판단력

언어매체를 이해·구사하는 인구의 수가 항상 한정적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인쇄매체시대의 공론은 시간적으로는 예컨대 영상매체에 비해 지속적이다. 영상은 잔상을 남길 뿐이지만 인쇄매체는 자연적 수명을 가진 物-件을 남긴다, 말하자면 建-物한다. 라디오나 TV매체의 보급에서부터 정보통신매체의 급속한 확산까지의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 기술적으로 그 가능한 대상이 되는 인구의 측면에서 - 전자통신망이 제공하는 공론의 장은 그 공간적 도달범위에서 사상 미증유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장 기록된 자료의 시간성은 엄청나게 시공간을 절약하는 저장매체의 도움으로 원칙적으로는 영원할 수도 있지만, 그 자료자체가 양적으로 방대하고 계속적으로 집적될 것이므로 사용자들이 개별 자료에 수동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자료에 접근하더라도 시간의 압박에 놓이는 경향이 생길 것이다 (지속적인 시간결핍 현상). 데이터베이스의 양과 자료처리작업이 요구하는 시간은 비례하기 때문에 자료가 많아질수록 개별적 자료에 주어지는 시간은 평균적으로는 줄어든다. 따라서 하나의 담론이 예컨대 라디오나 TV 매체에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광범위한 대중에게 뚜렷한 의도 없이도 도달될 수도 있는 것과 달리 전자통신매체 환경에서는 이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반면에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는 공간적으로는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통합효과를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참여의 원칙을 주로 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드시 적대적인 경향이 아닌 듯하다.

11) N. Luhmann, *Die Realität der Massenmedien*, Opladen 1995, 6쪽 참고.

12) 아래 III. 1. 참조

그렇지만 여기서 정치적 참여의 이념 자체는 오늘날 이론의 여지없이 여전히 고수되어야 할 원칙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할 지도 모른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매 정치적 의사결정을 시민에게 묻기에는 너무도 복잡적이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치과정을 게다가 - 선거나 투표에 입각한 - 참여의 이념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 (정치를 포함하여) 현대 민주주의는 더 포괄적인 규정을 요구하고 따라서 전자민주주의가 제공한다고 하는 참여가능성도 과대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이 총체적인 정치적 역량에 인과적으로 혁신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이 '전자민주주의'라는 '정치혁명'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 논의의 단순화가 될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매체의 기술발달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는 기술외적인 여러 조건들이 함께 주어졌을 때, 비로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매우 전제가 많은 정치적 기획인 것이다. 이 문제는 인격체의 구성과 현대사회의 복잡성(AI. 3)이 함축하는 문제들을 감안할 때 적절히 평가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보사회는 정보의 증가를 수반한다. 정보의 증가는 일정 한도에 이르면 정보과다로 인지된다. 정보과다에 반응하는 인격체의 반응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정보처리 시스템으로서의 인격체는 해당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선별적·선택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의 원리). 정보사회에서 증대되는 정보량에 대해 기술 또는 지식 상의 이유든 혹은 경제상의 이유든 개인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나 개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고양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섭취하지 않을 수 없는 강요에 처하게 됨으로서, 정보사회는 이 사회에서 행위하는 인격체들의 인성구조에도 어려운 여건이 된다. 고도의 복합적 지식과 정보처리 요구 등으로 인해 인격체는 자신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과부하 (information overload)에 빠지게 된다. 정보가 많다는 것 자체가 정보과잉인 것은 물론 아니다. 정보과잉은 정보수용자의 수용력에 대한 정보량의 상관자이다. 정보과잉이 나타나면 - 시스템의 자기유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기도 한데 - 정보수용자는 정보이용을 감소하거나 정보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다수의 선택에 자신을 내맡겨서 정보처리의 부담을 더는 등, 이른바 '수용자 극화(極化)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미 부분적으로는 현실이 된 세계사회, 그리고 정보통신매체로 더욱 확대되는 세계사회의 지평은 일상적 경험의 지평을 넘어서 있으므로, 전통적 삶의 세계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충분히 당혹스러운 세계이다. 세계가 넓어진 만큼 세계에 대한 경험은 오히려 축소된다. 경험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세계에 대응하려면 학습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문화적·예술적 패러다임을 위시하여 도대체가 신속히 바뀌는 현대사회에서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지평이 현재의 지평으로 깊숙이 침투해 옴으로써 "현재의 수축"을 가져올 뿐 아니라, 매체에 의해 매개된 과다한 정보소비는 수용자의 경험의 지평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용자는 비록 사건이 생긴 것을 듣고 알기는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어려우며, 일상생활에서의 수동적

태도의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지적도 가능하다.¹³⁾ 과연 정보사회의 인격체는 이 한계를 '극복'할 만큼 '성숙'할 것인가?

Y. Masuda는 참여민주주의의 조건으로서 여섯 개의 기본원리의 정착이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다.¹⁴⁾ 모든 시민 아니면 적어도 최대한의 시민이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협동을 통한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시너지 정신과 상호부조의 정신이 전 체계를 관통해야 하며, 모든 관련된 정보는 공중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하며, 시민의 이익과 희생은 그들 간에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해결책은 설득과 동의에 의해 찾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일단 결정되면 해결책을 적용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 원리들이 준수된다고 하여도 참여민주주의는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며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어떻게 생산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예컨대 국가방위나 전쟁과 같은 통치권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소수의사 존중의 원칙이 어디까지 견지되어야 하는가, 즉 소수의 저항에 대응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에 의하면 결국 시민들이 시너지 정신, 상호부조의 정신을 채택하도록 계몽과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계몽과 교육은 그때마다 형성되는 반대집단이나 개인들의 단계에서만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그들의 활동영역에서 매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우선 이 조건들은 정보사회가 개시한 가능성에 의거한다기 보다는 규범적 요청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지만 정보사회에 실재하는 가능성에 접목하지 않는 요청은 단순한 이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여기서 어렵지 않게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상황"의 조건들을 재발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언급된 전자민주주의의 조건들은 근대 민주주의의 조건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근대 대의민주주의는 이념적으로는 소규모 단위에서 가능한 (폴리스적) 민주주의가 대중적 기반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적어도 혁신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근대 민주주의의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하며, 전자민주주의론은 근대 민주주의의 지형학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 민주주의에 대한 조건으로 혹은 가능한 민주역량의 알리바이에 대한 '손쉬운 도피처'로 교육에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정보사회의 정치역량에 대한 평가에서 징후적인 것은 교육에 대한 의미부여이다. 정보장치의 사용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그것을 기계로서 다룰 줄 안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정보통신매체는 '망치'와는 다르며 상호적이라는 의미에서 '놀이기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매체의 사용은 일종의

문화이다. 정보사회의 인간이 파우스트적 의미의 자유로운 인간이라면 그는 학습과정과 편력(遍歷)을 통한 역사적 문화적 형성과정을 거쳐서 이 새로운 가능성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이들 이념의 배후에는 늦어도 20세기말에 더이상 자명한 것으로만 주장할 수만은 없는 계몽주의 내지는 계몽적 교육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그렇지만 대중문화론 내지 문화산업론에 의하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서의 전통적인 '보편적 지식인'은 퇴화할 시점에 있는 것이 된다. 인류역사의 대부분의 시기를 동반했던 음성매체, 그리고 문명기를 대표하는 문자매체 및 지식의 급격한 발달을 주도했던 인쇄매체의 발달이 계몽적 이념의 구현에 궁극적으로는 이바지하며, 지식의 무한한 진보와 보편적 교육의 확대는 인류의 해방 및 사회의 진보로 귀결하리라는 낙관적 기대가 있었던 반면, 금세기 들어 일반화된 영상매체 그리고 특히 금세기 후반기에 시간적으로 보면 이전 매체들의 유통기에 비해 현격히 짧은 기간 안에 생겨난 정보통신매체의 확산, 전지구적 차원의 의사소통 등으로 야기된 급격한 변화는 전시대에서와는 다른 불확실성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를테면 "학문의 위기", "지식인의 종언" 등의 표제어는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리오타르(J.-F. Lyotard)에게는 계몽의 이념은 "실패"한 것이다. 계몽의 기대주였던 교육의 일반화의 결과는 직업적 기능인의 양산에 귀착하고 있을 뿐이요, 지식의 습득은 좋은 수입을 보장하는 자격부여일 뿐이요, 지식인은 없다는 것이다.¹⁶⁾

지금까지의 일차적 숙고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숙고는 인격체가 정치적 시민으로 바람직한 정도로 성장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주의 요구이다. 인격체는 정보화의 파고에 위압당해 낙오되거나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 위에서 살핀 현상들은 어느 것이든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주체성의 함양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근대 계몽의 기획은 인간 이성의 보편성과 능력 개발에 대한 무한한 믿음에 의해 밀받침되었다. 고도로 계몽된 세계에서의 부분적인 주체의 퇴행이나 혹은 정체(停滯) 현상은 어쩌면 저 믿음이 현실의 인간에게 과분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부추긴다. 금세기 서구의 선진산업사회에서 목격된 주체의 퇴행 그리고 주체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이 퇴행에 더욱 더 강압적으로 저항하는 시도를 통해 주체는 계몽의 '레멸 논리'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말것이라는 "계몽의 변증법"은 비록 '과장'일지는 모르나 한 조각 경고로는 여전히 교훈적이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새로이 대두되는 정보통신망은 다양한 이익, 관심 집단을 위주로 한 다양한 소규모 정치세력에는 유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예컨대 좌/우)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을 넘어선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규합되는 이른바 "새로운 사회운동"에는 탈집중화된 의사소통의 장이 하나의 활력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공론

13) 이에 대해 H. Lübke, "Kulturelle und politische Folgen beschleunigter technischer Evolution", D. Mersch/J. C. Nyri (역음), *Computer, Kultur, Geschichte*, Wien 1991 참조. 이로부터 과거에 대한 보수적 회귀현상도 설명될 수는 있을 것이다.

14) Y. Masuda, *The Information Society*, Washington, D.C. 1981, 104쪽 이하.

15) Vámos, T., "Rechenwissenschaft und Demokratie", D. Mersch/J. C. Nyri (역음), *Computer, Kultur, Geschichte*, Wien 1991.

16) J.-F. 리오타르, 「지식인의 무덤」,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3.

장의 형성은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물질적 조건과 이에 참여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동기부여가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들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영역에서는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중매체까지를 포함한 매체환경이 정보수용자의 수동적 행태와 부응했다면, 전자통신망의 환경은 능동적 참여자들에게는 이전의 매체환경에서는 개시되기 어려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매체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 관심집단들의 대응, 즉 새로운 사회운동의 표출이 후기근대 정치학의 지형에 머무르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체형식의 변화는 그 형식적 특성만으로는 정치적 역량의 고양을 유도하기 어렵다. 이제 앞에서 지적한 두 번째의 논거를 고려해 보자. 전자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있을 조건을 제공하는 다른 아닌 ‘현대사회’의 - 기술 발달 이외의 - 다른 더 일반적 특성에 의해서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렵게 되는 면이 있다. 이 문제영역에서도 기술적 합리성으로부터 실천적 합리성으로의 비인과적인 상관관계를 추론할 몇가지 논거가 있기 때문이다.

3. 복잡성과 선택

근대의 소산인 사회의 기능적 분화의 결과 정치체제는 급증하는 정치적 개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나 이미 사회 내의 하나의 하부 체계로 변화한 정치체제가 그것에 대처할 능력은 전자화된 민주주의에 의해서도 본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a) 전자민주주의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편,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민을 항상 확보하고, 그들이 관건이 되는 사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고도로 복잡한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정치적 과제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이 정치논의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는 되었다 하더라도, 논의에서 바람직한 결정을 기대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가질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많은 시간의 투자를 요하는 일이다. 정보사회에서도 노동시간의 단축과 자유(여가)시간의 확대는 예측되나, 대중들이 말하자면 정치를 ‘취미’로 하지 않는 이상 대중이 여가시간을 이같은 문제의 천착에 투자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산업사회에서도 노동시간의 단축과 여가시간의 증가는 이루어졌지만 정치에의 관심은 그에 상응해서 증대되고 있지 않다.¹⁷⁾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에 대한 정보 과부하는 오히려 무관심과 방관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이럴 경우 적절한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집행되는 통제장치가 확립되어 있다면 ‘정보관료’가 행하는 결정의 폐해가 오히려 대중의 ‘정선되지’ 못한 참여보다 작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못한다.

17) 단지 H. 마르쿠제의 “일차원성”을 생각해 보라. H. 마르쿠제, 『일차원적 인간』, 차인석 옮김, 삼성출판사 1976.

(b) 대중에 의한 정치사항의 결정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국가사회 전체로 볼 때는 기능성이란 면에서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정치적 결정의 상호 충돌 및 방해라고 칭할 수 있는 현상이다. 현대에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수행될 문제들 가운데는 국지적 영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전지구적 파급효과를 갖는 문제나, 짧은 시간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남기는, 그리고 비가역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문제가 많음을 고려할 때, - 대중이 문제에 직면해서 선택한 정치적 해결책이 적중하는가의 문제는 우선 차치하고도 - 공간적으로 광범하고 시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가 높은 사안들이 많다. 이 경우 대중들이 혹시 지역적 이해에 따르거나 순간적 이해에 따라 내린 결정은 확대된 시간적·공간적 수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수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전자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기능성과 효율성의 측면과 다수의 결정이라는 정당성의 불균형이 대의제도보다도 더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c) 특정한 정치집안이 일정기간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보다는 그때마다의 여론의 향배에 민감히 반응하는 동향의 정치가 행해질 위험이 있다. 대의제도에서는 국정운영의 위임을 받고 일정기간 수행을 한 다음 그에 대한 평가를 선거를 통해 받음으로써 정치적 책임은 지게 되어 있다. 그때마다의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정당화된다면 만약 그 결정이 비효과적이었을 경우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없다. 여기서도 정당성과 효율성은 괴리된다.

(d) 참여가 확대될수록 정치적 사안을 선택하는 기제는 역설적으로 여전히 더 필요하다. 근대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의 심급으로서 정치체제의 역할에 대한 요구 및 기대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정치체제의 활동과 개입은 정당성에 의해 밀받침되어야 하므로 정치체제의 실제적 개입은 제한된다. 모든 문제가 정치적으로 처리될 수는 없으므로, 정치체제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 시민의 요구, 즉 정치적 사안의 선택을 담당하는 집단은 정보사회에서도 계속 필요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행정관료, 기술관료, 정보관료 등의 양적 비율은 조정되었지만 그들 관료가 존속하는 한 관료제의 폐해도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서도 관건은 관료조직을 통제가능한 수준에 두는 것이 될 것이다.

III. ‘정보화 정치’의 위험과 한계

1. 감시와 통제의 구조

정보사회의 주창자들은 한편, 대부분 미래에 대한 낙관론자들인데,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소리 높여 찬양한다. 다른 한편, 정보사회의 비판가들은 이를테면 특정한 정보관련 대기업의 세계 종속화를 경고하는 “저주성 이론”이나 아니면 문화상실을 경고하는 “황폐화 이론”으로 크게 대변된다. 오늘날 비판이론의 요건에는 이전 시대에 자본비판이 ‘기본요건’이었던 것과 유사하게, 환경오염에

대한 비판 외에 정보사회에 대한 경종도 하나의 필요조건이 된 듯한 면도 있다. 여기서는 정보화가 함축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을 감시와 통제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것인데, 이같은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개인(사생활)/공론과 국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공론이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측면이 있다면, 여기서는 그 역방향의 영향력 행사가 문제가 된다. 감시와 조작의 구조적 특성은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므로 정치체제와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감시와 (공론)조작가설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도 변화된다.

(a) 대중매체가 그것이 가진 대중접촉의 폭과 효과의 강도에 의해 대중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조작가설이라 불러 보자. 그렇지만 이러한 조작가설은 단순하며 경험적 연구의 방증을 확고히 얻지도 못한다. 한편, 여기서는 주체가 수행하는 구성력이 도외시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견해의 근거에는 주체가 정보의 '유단폭격'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다. 그렇지만 의사소통, 더 정확히는 의미전달과정에 수용자의 구성이 매개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문화산업론의 주장의 '합리적 핵'은 이를테면 개인적 종합이 사회적 종합으로 대체된다는 주장으로 번역되어야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산업론에서는 모든 형태의 '진정한 의식'의 부정태에 대한 '속죄양'의 역할이 대중매체에 떠맡겨 진다: "뉴미디어는 탈산업사회의 속죄양이다. 그것은 뼈뺌하게 가는 온갖 것에 책임이 있다."¹⁸⁾ 자본주의를 지양할 혁명의 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 결여로부터 자율적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책임 하에 인수하는 - 칸트적 의미의 - 자율적 주체의식의 상실에까지 이른바 실패한 계몽의 원흉은 대중매체라는 것이다. 맥루한(M. McLuhan)은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의 대답까지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 매체형식 자체의 내용성에 대한 주목은 자극적이고 무엇보다도 선구적이다. 그렇지만 뉴미디어 기술이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주요한 요인은 "미디어 기술의 본질보다는 미디어 이용습관의 본질에 더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¹⁹⁾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또한 주목되어야 한다. 대체로 문화화 산업론은 신문, 잡지, 영화 및 공중과 방송 즉 라디오 및 TV 등 이른바 '대중매체'의 시대에 더 적절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론으로 보인다. 뉴미디어 환경은 대중매체를 중심으로한 의사소통양식과는 다른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이와 함께 조작가설의 타당성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른바 '조작이론'에는 발신 - 매체(전달) - 수신 3항이 이루는 의사소통에 대한 '전달모델'이 그 근거에 있다.²⁰⁾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매체를 통한 전달에 의해 성립하므로 이 모델에 의하면 조작은 발신자와 매체 사이에서 일어나고, 매체와 수신자의 관계는 일방적 영향 미침의 관계, 즉 수신자는 전달된 내용

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는 일방향적인 과정으로 파악된다. 발신자는 매체를 통제해서 전달내용을 일원화하고, 수신자는 매체가 전하는 내용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모델은 매체와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수용자의 매체에 대한 자발성을 과소평가하는 약점을 가진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조작가설이 뉴미디어 환경에서 변화된 매체와 수용자 관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현실 정치적 시각을 위해서는 매체형식의 변화에 따른 조작가능성뿐만 아니라 매체와 매체 외적인 환경계와의 관계가 더 상세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매체 외부의 환경계는 정치권력일 수도 있고 경제권력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힘과 이익을 추구하는 계층과 집단일 수도 있다. 매체의 환경계는 매체형식의 내적 구조에 직접 관련되지는 않으나 매체는 환경계로부터의 영향을 매체형식의 코드(여론/비여론)에 따라 변환하여 반영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조작자는 드러나지 않기가 쉽다.

그러나 매체변동의 경관(景觀)에서 이른바 뉴미디어의 대두는 발신 - 매체 - 수용의 관계에 인과적 연쇄반응의 고리를 설정하기를 점차 더 어렵게 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뉴미디어의 새로운 몇 가지 특성들이 일방적 조작가설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제한을 가한다. 대중매체와 비교해 볼 때 우선은 양적인 변화로 보이는 이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그러나 단순히 양적인 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질과 양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뉴미디어의 환경에서 '조작가설'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통적 대중매체와는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다. 수개의 전국 공중과 TV 채널에 비해 몇십 배의 케이블 TV를 포함한 다양한 위성방송 채널로 나타나는 매체 종류와 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일별조차 또 다른 보조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는 용이치 않게 한다.²¹⁾ 매체의 수용자의 행태는 단순히 자극-반응의 도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정보과부하이론'이든 '부분적 주목이론'이든 간에 정보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선택되고 부분적으로만 주목된다. 정보폭발은 의식체계의 환경계에서의 사건이고 의식체계 내에서 정보폭발이란 없다. 이른바 정보사회에 대해 "좌파 조작주의"가 의존하는 "완전히 통제되는 의식 산업"의 가설은 오히려 과거의 지배형태에 유효할 수 있었던 모델이며 현대의 정보사회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네트워크는 임계치를 넘어서서는 더 이상 중앙집중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으며 "통계학적"으로만 다룰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시스템 전부를 감시하려면 그 시스템 자체보다 더 큰 감시장치가 필요하리라는 추정이다.²²⁾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수의 매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물론 네트워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을 때 그러하고, 선별적 감시의 확실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수미디어 환경에서도 가령 언론매체들이 하이어나키적으로 감시기관으로부터 통제된다면 자율적

18) N. Bolz는 그간의 논의를 이 압축적인 한마디로 요약한다. N. Bolz, *Die Sinngesellschaft*, Düsseldorf 1997, 181쪽.

19) W. R. Neuman, 『뉴미디어와 사회변동』, 전석호 옮김, 나남출판 1995, 215쪽.

20) 이 의사소통모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줄고, 『의사소통과 매체』, 김상환 외, 『매체의 철학』, 나남출판 1998, 374쪽 이하 참조.

21) 복수 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의 과부하 및 주의력의 현격한 감퇴에 대해서 단지 한 예로 W. R. Neuman, 위의 책, 163쪽 이하를 보라.

22) H. M. Enzensberger, 『미디어 이론의 제 요소』, 『뉴미디어 영상미학』, 권중운 편역, 민음사 1994, 169쪽 이하.

언론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다. 언론매체의 이중적인 의미의 민주화, 한편 감시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다른 한편, 언론매체 내부에서의 자율적 조직의 운용이 관건이 된다.

(b) 감시의 범위와 밀도를 고려해 보는 것은 유용하다. 이 측면에서 근대 내지 근대 이전적 시공간의 특성과 그 안에서의 감시의 특징을 규정하고,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이와 구별되는 정보사회에서의 감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시는 지배관계의 표출이다. '목숨을 건' 인정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 지배관계가 설립되기도 하지만 감시를 통해서 지배관계는 유지된다. 감시하는 자는 피감시자에 대해 힘과 지배력을 행사하려 하며, 피감시자는 감시자에 의해 행동과 - 경우에 따라서는 - 사고의 자유까지 상실하거나 혹은 마비 당하고 지배관계에 처하게 된다. 감시는 특정한 종류의 관찰이다. 감시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관찰되어야 하며, 관찰의 수단은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감각능력이다. 인간중의 가장 탁월한 감시수단은 시각이다. 시선은 직진하므로, 시각의 이상이 없고 시선의 직진성을 방해할 장애물이 없는 한 시각은 거리 상으로는 뛰어난 원격관찰이 가능한 능력이다. 특히 인간에 있어서는 시각은 예컨대 음성에 비해서는 현저히 우수한 유기체적 능력이었다.²³⁾

푸코(M. Foucault)의 원형감옥의 예는 전형적인 근대적 감시의 시공간 질서를 기술한 본보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감시의 공간은 중심점으로부터의 관찰이다. 여기서 감시와 관찰은 삼차원적인 객관적·자연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시각의 공간, 시각장의 직진성이 말하자면 감시의 공간구조의 '설계'를 결정한 것이다. 원형감옥의 예에서 관찰의 중심점은 관찰(감시)자이고, 원주의 지점은 피관찰(감시)자로 설정된다. 원주 상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지점에 따른 관찰력의 차이는 있으나, 원주상의 지점들 간의 관찰력의 차이와 원주지점들과 중심점 사이의 관찰력의 차이는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양의 차가 아니다. 시각의 중심은 권력의 중심이고 視-線은 권력의 행사이다. 공간은 힘을 반영하거나 지배의 장인 것이다.

정보사회에서의 감시의 시공간은 시공간의 질서 및 관찰의 구조가 근대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회에서도 지배관계는 그것의 주도적 유형이나 세력, 그것이 표출되는 장소 등은 재편되겠으나 여전히 존속한다. "뉴미디어"가 개시하는 정보화는 다대다(多對多) 소통을 가능케 하는, 이 점에서는 사실상 인류역사상 의사소통의 새 차원인 면이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정보통신망이 결합된 장에서의 관찰은 원칙적으로는 모두가 관찰의 주체이자 관찰의 객체이다.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전통적 원근법은 와해된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관찰은 무중심적 편재적(遍在的) 관찰이라 부를 만하다. 정보통신망에서는 근대적 공간성에 의해 야기된 힘과 지배는 그대로 통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관찰 가능성의 증대는 "위협"의 증가를 가져온다.

23) 음성은 한 방향으로 직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도 확산되어 보이지 않는 범위에서도 '엿들을' 수 있지만, 음성의 도달거리는 시각에 비하면 보통의 경우 두드러지게 제한되어 있다.

단순히 정보의 증가와 집중이 정보노출 위험의 증가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관찰가능성의 증대가 위험의 증가를 가져온다.

정보통신망에서는 관찰의 주체와 대상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누구나 관찰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관찰 당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누구나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능동적 수행을 하고, 누구나 거기에 반응적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역작용의 측면에서는 다에 의한 다의 감시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이전 사회에서 감시의 주체로서 감시기관이 있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원리적으로는 누구나 불특정 개인들을 감시할 수 있다.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에 정보통신매체의 단말기가 편재한다면 항시 작동하는 감시가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정보통신매체 장에서의 감시의 탈시공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다. 이같은 감시의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참여하며²⁴⁾ 또한 자발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한다는 사실이다. 한 단계의 기술적 발달의 결과인 정보매체는 많은 경우 편익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매체의 사회적 도입은 흔히 쉽게 용인되지만, 다른 아닌 이와 같은 기체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는 말하자면 "자기생산적"으로 증식되고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여기서 '위협'을 안은 기술도입을 허용하고 혹은 허용하지 않는 경계선은 보통의 경우 - 단순히 개인의 의지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지적인 불확실성 때문에도 - 단정적으로 그을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 그렇지만 기술매체도입이 넘어선 안될 경계를 넘어선 것은 그것이 드러내는 역기능에서 확인되지만, 많은 경우 그 역기능 때문에 그것의 순기능이 포기될 정도로 기술매체의 경계침입이 생활세계에 대한 결정적인 침해로는 간주되지 않는 듯하다. 기술매체 도입에 대한 결정적인 사회적 저항력은 확정적이지 않다. 기술에 대한 '저항력'이란 주제는 단순히 개인들의 자율적 선택을 넘어선 체계의 필요성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항존하는 일자(一者)에 의한 대규모 관찰(감시)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푸코의 감시가 판옵티콘이라면, 정보통신매체의 공간에서의 감시는 그것이 기술적 가능성이 제공하는 기회에 따라 전면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면 가히 초판옵티콘이라 할 만하다.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의도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폐해는 이전 사회에서의 어떤 감시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도적 관찰은 이론적으로는 개인이나 대규모 기관 어느 것에 의해서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관찰 및 집중적 관찰이 가능하려면 관찰기술의 확보 및 관찰을 위한 시간자원이 요구되거나와 이 작업은 자본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에 현실적으로 이런 감시를 의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대규모 기관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들의 사적 영역에 대한 큰 위협이지만, 다만 이 경우 정보통신망의 편재적 관찰의 특성상 대

24) 어떤 종류의 설사 비정보 조직적 결사나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서도 개인들은 자신에 관한, 그 목적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전혀 필요치 않은 범위에까지 해당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게끔 된다. 그 정보들이 추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 및 처리될 지에 대한 규약이 없는 것이 허다한 것도 문제이다.

140 철학연구회 98년 '춘계 학술 발표회'

규모 관찰자도 다시금 관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성립하므로 불법적 감시를 위해 관찰을 감행할 경우 그 기관은 자신의 관찰이 다시 관찰될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대규모 관찰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여기서도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은 매체환경 자체보다도 기관에 의한 대규모 감시에 대한 그 사회의 민주화 정도에 달려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

2. 정보소유와 불평등

자본은 정보사회에서도 - 여전히 혹은 점차 더 -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거나 있을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정보의 불평등한 소유는 피할 수 없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기호 가치를 획득하고, 또한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정보사회론자들이 주장 하듯이 주요한 '경제적 가치'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컨대 - 정보부자/정보빈자의 구별이 반드시 화폐부자/화폐빈자의 구별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잠시 접어 두고서도 - 정보부자/정보빈자의 구분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계층의 차이는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형태와는 다를지라도 여전히 존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회계층 분화의 차원에서 의미하는 것은 계급이나 계층의 소멸이 아니라 그것의 재편성이요 재편의 원칙과 기제의 변화이다. 한편, 근대자본주의는 자본/노동의 분화에 기인하고, 노동이 부가가치 산출의 원천이 되는 자본축적 시스템으로 이해된다(K. Marx). 다른 한편, 근대 자본주의의 특성은 그 계산적 합리성에 있다고 보고, 노동, 재화의 획득, 영리추구에 나타난 금욕적 생활태도, 즉, 부단한 노동활동, 직업활동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됨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M. Weber). 이들 이론의 자본주의 이해 및 평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을지라도,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사항은 첫째, 그로 인해 후에 현실이 되듯이 고도의 자본축적이 진척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신분제적 계층구조의 고착성은 붕괴되어서 계층구조에서의 유동성이 증가되었지만, 그리고 자본주의는 기존계층의 몰락과 새로운 계층의 부상 등 계층구조의 재편을 가져왔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비교적 고정적인 계층구조를 완전히 타파할 조건을 여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약이 없이 균등화될 수 있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정보사회에서는 계층해소에 긍정적인 경향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전제가 많은 가정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고,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누구에게나 '평등'할 수 있다 해도 정보가치의 소유가능성은 자본축적의 주요수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본격차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 더구나 "세계사회"의 차원에서는 - 배제할 수 없다.

흔히 많이 제기 되어 온 정보독점의 위험은 국내 정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야기될 소지가 더 높고 그 위험도 앞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참여자들에게는 앞서 논의된 대로 정보통신망이 탈집중적 매체로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으나, 국제적 관계에서는 대규모 정보관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정보제국주의와 정보식민지화의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정보수집력과 정보분석력 등이 고도의 기술적 장치와 비용을 요구함을 감안할 때 이것을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들은 많지 않다. 정보사회에서도 국제관계에 서는 여전히 전통적 유형의 분쟁·갈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또한 새로이 야기된 유형의 분쟁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세계정치는 중심부의 소수 국가들이 정보의 생산 그리고 분배에서의 우월한 위치 등을 가짐에 따라 주변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 중심부 국가에 의한 특정 정보의 차단, 선택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의 조작까지 포함하여 여러 범위에 걸치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정보통신매체의 전세계적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국민주권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올 지도 모르나, 전세계적 네트워크의 확대는 자국에 국한되는 세력변화 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세력균형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통신매체의 네트워크에서 현실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심부 국가인 한에서는 국제관계에서 하이어나라키 조직에서 헤테아라키 조직원리로 변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3. 기술과 사회적 민주화

기술결정론적 견해에 의한다면 기술의 변화는 단절적인 정치변동을 유도할 것이다. 전자민주주의 논의는 많은 경우 기술결정론적 단순화의 위험을 안고 있다. 기술결정론의 논의를 벗어나려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의 논의로부터 사회구성의 논의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도입되고 사회적 장치로 제도화되어 관찰될 수 있는 사회구성적인 변동이 확인되어야 한다. 정보화가 특히 문화 등 다른 영역에서 가져온 충격 등이 비교적 빨리 감지된 것에 비하면 정치영역에서의 정보화의 파장은 늦게 감지되는 면이 있다. 그 이유는 정치체계에서는 정보화가 제도화되어야 사회전체적 의미를 가지는데 정치영역에서의 제도화는 비교적 늦게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은 자연에 대한 지배이다. 기술에 내포된 이 (자연의) 지배는 기술의 아프리오리인가 아니면 지배는 기술 자체에 내재적인 본질이 아닌 중립적 현상이고 기술 자체는 지배에 대해 중립적인가? 후자라면 기술의 지배적 성격은 기술 적용의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고 지배는 기술의 적용에서 발생한다는 견해이고, 둘째는 기술 자체를 지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고, 셋째는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에서 해방의 잠재성을 읽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은 외적 자연을 지배하지만 외적 자연의 지배는 내적 자연의 지배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수반한다는 것이 "계몽의 변증법"의 통찰이었다. 기술의 역설은 기술이 지배를 도모하는 목적 그 자체가 오히려 지배의 대상으로 전화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기술과 지배의 문제가 정보기술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정보사회의 정치변동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두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 확대되는 점에 주목해서 정치체계에 정보통신매체가 도입되는 것을 '더 많은'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보는 긍정론과, 같은 현상에서 오히려 감시와 통제의 위협을 보는 부정론이 그것이다.²⁵⁾ 그렇지만 정보사회의 정치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도 여전히 기술결정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달리 본고의 논의가 옳다면 정보사회의 정치는 단순히 기술적(技術的)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정치적 문제이다. 정보사회의 정치형태로서의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 및 한계는 단순히 기술결정론적으로가 아니라 근대 이후 사회의 정치적 지형의 완성에 크게 의존적인 것이다.

정치체계의 정보화는 감시와 지배의 구조에도 변동을 초래하고 여기에 반영된다. 그렇지만 정보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사실은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매체화 내지는 정보화에 앞서 사회의 정치체계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정보화 자체가 반-중앙집중화를 개연적으로 만들더라도 이로부터 민주화의 증진을 도출하는 것은 성급한 낙관주의로 보인다. 이러한 추론은 매체형식의 변화를 내용의 변화 자체로 추론하는 점에서 기술결정론이라는 비판에 노출되기 쉽다.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사회변동은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주의의 토양이 단단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한 도약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나 사회전반적인 민주화가 취약한 사회에서는 정치영역에서의 정보화가 역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힘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라기 보다는 역설적으로 힘을 전제한다. 민주주의는 힘의 말살이 아니라 힘의 가시화요 절차에 따르는 통제장치 아래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한 수단이 다시 힘이다. 혹자는 이 같은 "전략적" 힘과 이성적 협의에 의해 도출된 합의에 의한 "합리적 동기부여"를 구별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힘"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즉, '강제 없는 강요'라는 의미의 '합리적인 자기구속력'을 설정하려고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배나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화상황을 "반사실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실제 대화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의사소통 매체가 구성하는 공론의 정당성은 이와 같은 전제가 많은 의사소통이론에 결부되어야 할까? 이런 견해의 배후에는 공론을 자유로운 토론에 의한 합의와 동의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동일성 논리가 있다. 현상학에서 유래하는 생활세계 개념은 공동성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상정되어 왔다. 생활세계는 합의에 의해 성취된 말하자면 응축된 공동성이라는 것이다. 이 생활세계와 합의의 연계는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개념에까지 이르고 있다. 전통적 견해는 사회의 안정성을 - 계약론적이거나 의사소통이론적이거나 간에 - 동일성의 도출에서 찾고 있다. 그렇지만 아마도 정보통신매체의 시대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은 이 '친숙한' 가정일지도 모른다. 안정성이란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객관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역동성과 비교정성,

비안정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 및 이것이 제공하는 사회통합의 성격에 대한 이해부족의 산물이다. 비동일성은 안정성과 모순되지 않으며, 안정성은 동일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널리 퍼져 있는 견해와는 달리 합의와 동의에 기반하지 않는다. 이 주장은 합의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만 민주주의의 조건은 아니라는 뜻이다. 민주주의를 실제로 이러한 전제 위에 둔다면 민주주의는 이미 처음부터 좌절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공론이 이와 같은 '규범적' 해석으로부터 벗어나면 정치체계 내에서 공론이 차지하는 위치는 민주정치에서 새로운 적극적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차이이론적으로 이해된 공론은 잡음과 동조(同調)의 구별로 사유될 수 있다. 공론이 담지한 의사소통의 출발은 잡음이다. 공론은 수시로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지속하는 잡음이 이것에 접속되는 잡음의 산출에 의해 '대상성'을 획득한 것이다. 이를테면 잡음의 동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동조는 잠정적으로만 유효하며 새로운 잡음은 또한 다른 잡음의 접속을 부르고 이로부터 새로운 '주파수'로의 동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잡음은 불협화음의 구성요소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불협화음은 협화음을 전제하고 그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하는 한 파괴적인 소리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잡음은 처음에는 하나의 유의미한 신호로서 포착되지 않았을 뿐이나 이미 신호이며 그것이 공명을 얻게 되면 유의미한 신호가 되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이 바로 공론의 불안정성을 설명해 준다. 여기에 앞서 지적된 여론지향적 정치의 위험이 기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합의나 동의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아질 수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동일성의 획득이 아니라 차이를 관용하고 지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매우 위태로운 도모이다. 대화와 협의는 민주주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며, 이를 통한 합의에의 도달은 이상이 아니라 형운이다. 민주주의는 비단 정치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하부 조직이나 기관 내부를 위시하여 사회의 전 하부체계에서 자체적으로 추구·실현되어야 할 조직원리로서, 사회분화를 통해 형성된 하부체계들이 합법적 절차적 과정을 거치고 자체적 운영논리의 준수를 통해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전반적인 민주화의 증진과 활성화가 정치체계의 전체의 민주화 증진과 결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정보통신 매체의 사회적 도입, 즉 정보화 자체가 또는 매체형식 자체가 정치체계 내의 운용에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가 여부의 문제는 매체형식의 변화에서 내용의 변화를 도출하려는 시도처럼 환원론적이 되기 쉽다. 정보사회의 정치변동은 일반적 사회변동의 상관자이고 이것과 보조를 함께 한다. 정보화가 정치변동을 초래하고 정치변동은 사회변동으로 귀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이중의 환원론이다. 정보사회가 전자민주주의로써 진정 인류의 오래된, 그러나 그것 자체로서 실현되지 못한 직접 민주주의 혹은 그 밖의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계를 촉진시키거나 실현시키는데 기여하느냐 여부의 문제는 사회전반적 민주화의 함수이지 단지 (정보)기술화의 함수는 아닌 것이다. 전자민주주의에 사실상 잠재된 '폭발적 힘'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25) 이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 대한 논의로 H. Buchstein, "Bittere Bytes: Cyberbürger und Demokratietheorie",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44 (1996) 4 참조.

전반적인 사회적 민주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적 조직의 확대, 민주적 문화의 함양, 민주적 인격체의 형성 등에서 동시적으로 추구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인쇄매체의 발달이 지식의 유통을 촉진하고 교양을 '대중화'하고 계몽의 성립에 기여했다면, 그것이 파시즘과 현실사회주의체제에서와 같이 오히려 지식과 정보의 독점에 의한 효율적 선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기술은 국가 이데올로기 전파의 수단이고 직접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발적 충성을 유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정치의 문제이다.

참고문헌

- 강정인,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한림과학원 편, 『정보사회, 그 문화와 윤리』, 소화 1996.
- 이정복, 「정보화사회와 정치」, 최정호 외, 『정보사회와 우리』, 소화 1996.
- 정호근, 「분화와 물화 - 긴장의 장으로서의 근대성」, 이명현 외, 『근대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 철학과 현실사 1998.
- , 「의사소통과 매체」, 김상환 외, 『매체의 철학』, 나남출판 1998.
- , 「정보통신문명과 사회구조의 변동」, 한국철학회 편, 『기술문명에 대한 철학적 반성』, 철학과 현실사 1998.
- Arterton, Ch., 『텔레데모크라시』, 한백연구재단 편역, 거름 1994; 武田文彦,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융합. 텔레데모크라시”(Ch. 아터튼, 위의 책에 보른 2로 수록).
- Bartels, K., “Kybernetik als Metapher. Der Beitrag des franzosischen Strukturalismus zu einer Philosophie der Information und der Massenmedien”, H. Brackert/F. Wefelmeyer (역음), *Kultur. Bestimmungen im 20. Jahrhundert*, Frankfurt/M. 1990.
- Bolz, N., *Die Sinngesellschaft*, Düsseldorf 1997.
- Buchstein, H., “Bittere Bytes: Cyberbürger und Demokratietheorie”,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44 (1996) 4.
- Enzensberger, H. M., 「미디어 이론의 제 요소」, 『뉴미디어 영상미학』, 권중운 편역, 민음사 1994.
- Habermas, J.,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제2권, Frankfurt/M. 1995.
- Haungs, P., “Aktuelle Probleme der Parteiendemokratie”, *Jahrbuch für Politik*, Halbband 1, 1992.
- Luhmann, N., *Die Realität der Massenmedien*, Opladen 1995.
- , *Soziologie des Risikos*, Berlin/New York 1991.
- Lübbe, H., “Kulturelle und politische Folgen beschleunigter technischer

Evolution”, D. Mersch/J. C. Nyri (역음), *Computer, Kultur, Geschichte*, Wien 1991.

- Marcuse, H., 『일차원적 인간』, 차인석 옮김, 삼성출판사 1976.
- Masuda, Y., *The Information Society*, Washington, D.C. 1981.
- Mersch, D./Nyri, J. C. (역음), *Computer, Kultur, Geschichte*, Wien 1991.
- Neuman, W. R., 『뉴미디어와 사회변동』, 전석호 옮김, 나남 1995.
- Poster, M., “CyberDemocracy: Internet and the Public Sphere”, http://www.humanities.uci.edu/~human/history/faculty/poster/poster_mark/writings/democ.html
- Raulet, G., “Die neue Utopie. Die soziologische und philosophische Bedeutung de neuen Kommunikationstechnologien”, in: M. Frank 외 역음, *Die Frage nach dem Subjekt*, Frankfurt/M. 1988.
- Ronfeldt, D., 『정보지배사회가 오고 있다』, 홍석기 옮김, 자작나무 1997.
- Vámos, T., “Rechenwissenschaft und Demokratie”, D. Mersch/J. C. Nyri (역음), *Computer, Kultur, Geschichte*, Wien 1991.

정보사회로의 변동과 정치적 무변동론의 철학적 난점

: 정 호 근, 「정보사회의 정치변동-‘전자민주주의’의 명암」에 대한 논평을 위주로

홍 윤 기 (서울대)

1. 정보사회로의 <변동>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시도의 난점: 이초식 선생의 <정보 화시대 새로움 규정>에 대한 김영정 선생의 <새로움 논의의 구태의연함 반증>의 논변

1995년 8월 바로 이 연세대학교에서 『인간다운 삶과 철학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한민족철학자 대회에서 고려대의 이초식 선생은 “新史時代”라는 신조용어를 적용하여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양상들을 이전의 先史時代나 歷史時代와 개념적으로 구별하고자 하였다.(이초식 1995, 142) 정보화시대를 주로 “경제적 변화의 측면에서” 제2의 산업혁명의 소산으로 보거나 제3의 물결로 표현하는 시각과는 달리, 이초식 선생은 “산업혁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자·기호혁명, 인지·인식혁명, 문화·생활혁명을 수반하는 대규모의 변혁이므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도덕, 법률, 과학, 기술, 예술, 종교 등 인간의 문화 전반적인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화시대를 제2의 역사시대로 보는 (자신의-필자첨가) 시각”을 정당화하고 있다.(위의 글, 143~4) 이런 시각에서 이초식 선생은 <文字>의 존립여부와 그 양상을 기준으로 “無文字의 先史時代, 自然文字의 歷史時代”와 뚜렷이 구별하여 “人工文字의 新史時代(제2역사시대)”를 정보화시대의 독립적인 시대성격으로 부각시켰다.(위의 글, 144)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규정에 입각하여 이초식 선생은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야기 보따리(narrative package)”(위의 글, 142)를 서로 상반된 측면에서 풀어 놓았다. 우선 신사시대로서의 정보화사회에서 전개되는 세계상은 대단히 인간의 인식지평에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즉, “역사시대에서 비리보는 세계가 회색빛 단색 이론으로 물들여졌고 주로 단일감관으로 감지되어 왔다면, 정보화시대에서 멀티미디어로 바라보는 세계는 천연색에 가깝게 다양한 색상으로 감지되며 두 개 이상의 감관들에서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감지되는 세계다. 이차원적인 그림이나 삼차원적인 조각으로부터 사차원적인 무성활동사진으로, 그리고 다시금 유성활동사진과 텔레비존으로 다감각화되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위의 글, 152) 이 반면 “정보화시대라는 이야기 보따리에 들어 있는 어두운 이야기들”의 “시리즈”로는 “정보기술의 독점을 위한 투쟁이 초래하는 부작용, 독점된 정보기술의 횡포, 그 결과 가속화되는 빈부의 격차, 경쟁에서 낙후된 집단들의

예속화 현상, 세계화된 정보통신으로 인한 다양한 인간문화의 획일화의 위험 등”이 지적되었다.(위의 글, 153) 이 밖에도 주로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가공할 만한 인간통제와 억압”의 가능성을 열거하면서 이초식 선생은 그런 부정적 현상 및 가능성 모두를 “신사시대<의> 병리현상”(강조 평자)로 규정하였다.(위의 글 154)

그런데 이채로운 것은 이초식 선생의 논지, 즉 정보화시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나타났던 어떤 시대와도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라는 주장에 대해 논평자로 나선 김영정 선생의 문제제기방향이 한국에서 정보사회를 연구함에 있어서 역사인식상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본 평자가 정확히 이해했다면, 김영정 선생의 반증요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¹⁾

[김영정-1. 정보화시대의 <새로움>에 대한 정당화 근거의 보강 요구]: 만약 정보화시대가. 이초식 선생의 주장대로,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시대라고 한다면, 그 새로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당화 논거가 필요”하다.(김영정 1995, 167)

[김영정-2. 정보화시대 문제현상으로 지목된 사항들의 <구태의연함>]: “(이초식 선생에 의해) 정보화 시대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비인간화 논의들은 실제로는 산업시대에 제기되었던 논의들에 불과하다.”(같은 글, 같은 쪽)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초식 선생의 논의가 옳다면 이초식 선생이 제기한 <정보화시대 새로움 규정>은 합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

정호근 선생의 글에 대한 논평에서 근 3년 전에 발표된 제3자의 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례이다. 그러나 위의 주장과 그 반증은 IMF 사태 이전 세계화 논의와 더불어 과거의 조국 근대화 담론과 맞먹는 강도를 갖고 행정권과 언론권에서 통치 이데올로기적으로 — 따라서 거의 작위적으로 — 부추겨진 사회철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들 사이의 정보사회담론 내지 정보화담론을 대할 때마다 평자가 느꼈던 철학적인 곤혹스러움을 압축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와 청중이 평자의 이 무례한 재론을 너그러이 양해하길 빌 뿐이다.

평자가 보기에 정보화사회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은 대체로 서로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갈라지고 있다.

(1) 하나는 이초식 선생처럼 정보화 사회, 또는 정보사회를 지금까지 역사상 나타났던 그 모든 사회유형과 성격적으로 판이하게 구별되는 사회유형으로 간주하고, 그 방향으로의 발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그 방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과 구조를 규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담론방식이다. 주로 사회과학계 쪽에서 정보사회담론에 대한 별다

1) 여기에서 김영정 선생의 입장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왜냐하면 김영정 선생 자신은 정보화사회가 과연 새로운 유형의 사회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른 전제반성 없이 진행되는 이런 방식의 담론에는 김영정 선생이 제기한 바와 같은 종류의 정당화 부담, 즉 정보(화)사회에서 과연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충분히 규명해야 하는 부담이 지워진다.²⁾

(2) 주로 사회철학계에서 나타나고 이와 전혀 상반되는 방향으로 진행된 또 다른 담론은 1)정보(화)사회란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진 기술 발전의 한 특정 결과일 뿐 그 자체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근본적 변동을 거론할 만한 이론적 비증을 갖지 않으며, 2)특히 사회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방향으로의 사회변동은 실천의식적으로 추구할 만한 그 어떤 긍정적인 가치도 없다는 점을 역점적으로 강조한다.³⁾

정호근 선생의 논의가 주목되는 것은 단지 지금 당장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글 이전에 (1)의 문제를 “사회구성체 변동의 문제”(정호근 1997, 341)로 포착하고 있고, 거기에서 견지된 입장을 거의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정보사회의 정치변동이라는 현재의 주제도 정연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선생의 평소 논의를 보면 잘 훈련된 논증적 사고가 어떤 것인가를 훌륭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 현재의 발제문은 주제를 달리한 논증의 형식적 일관성을 갖고 사태를 추적하는 것이 논점의 부각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실히 느끼게 해준다.

2. “현대” 정치 전개의 한 양상으로서 “정보사회에서의 정치”를 보는 관점의 문제점

그러나 평자로서는 정 선생 논의의 바로 이 일관성이 정보사회에서의 <정치>라면 몰라도 그 정치<변동>을 보는 데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보사회를 논하는 정 선생 논의의 일관성은 앞에서 제시된 [김영정-2] 논의를 간단하게 비껴갈 수 있게 한다. 즉 일찍이 정 선생은 정보사회를 “근대사회의 메카니즘의 연속선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보사회로 기술되는 특징들” 역시 “기본적으로 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개시된 가능성들의 철저화”로 파악하는 데서 자신의 정보사회 담론의 출발점을 설정한다.(위의 글, 342) 다시 말해서 정보사회란 사회적·기술적 측면에서 산업사회 제양상의 철저한 관철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사회구성체론상으로도 “철거화된 근대사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므로 그 자체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같은 쪽) 이에 따라 기본성격적으로 “정보사회는 ... 어떤 기준으로도 말하자면 사회전체를 포괄하는 표제어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근대성의 소산인 현대사회의 형성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부분이론으로 포섭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위의 글, 346)

2) 국내 학계에서 이 방향의 문제의식은 거의 정면으로 제기된 바가 없다. 다만 문명의 전환이란 견지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거시적으로 논한 것으로 윤영민(1997)이 있다. 국외의 논의로는 포스터(1996)가 제기하는 <정보양식론>이 주목할 만하다.

3) 여기에서 2)의 논점에 대해서는 문현병(1997)과 스톨(1996)을 참조.

정보사회(이론들)를 보는 정 선생의 이러한 기본 시각이 정치의 장에 적용된 현재의 논문은 실제로 정 선생의 기본시각을 또 다시 확인, 반복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당연히 정 선생은 정보사회를 추동하는 기술적 성과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의 일반화”가 정치활동의 영역, 그 가운데서도 정치적인사결정과정에 새로운 요인들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결코 인식하지 않게 인정한다. 정보사회의 강점들을 유감없이 보여 주는 이 새로운 요인들의 정치적 관철양식을 정 선생은 전통적인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전자민주주의”의 현실적 가능성으로 요약한다. 즉, “전자민주주의는 예컨대 전화자동접수나 또는 단말기를 통한 투표 등에 국한되어 있는 듯하다. 이것도 물론 의사결정과정의 간편화를 통해 규모 때문에 제한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치영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한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정치과정의 변화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컴퓨터 단말기들의 확대 보급에 의한 전국적 나아가 세계적 정보통신망의 형성은 정보통신역량의 새로운 차원의 개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개인적·사회적 의사소통 기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의사소통방식으로서의 정보통신망의 일반화에 의해 새로운 차원의 정치장이 형성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치체제의 변동을 유도할지도 모른다. 전자민주주의의 미래는 아직 열려진 차원이다.”(논3) 나아가 “전자통신망의 급속한 확산과 정보통신매체의 사회적 도입은 새로운 공론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공론형성 기제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논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적 발전과정이 발생시키는 정치변동의 폭과 그 질에는 언제나 유보조건이 붙는다. 즉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이 총체적인 정치적 역량에 인과적으로 혁신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이 ‘전자민주주의’라는 ‘정치혁명’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 논의의 단순화가 될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매체의 기술발달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는 기술외적인 여러 조건들이 함께 주어졌을 때, 비로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매우 전제가 많은 정치적 기획인 것이다.”(논7) 바로 이런 <변화는 한다. 다만……(O.K. But……)> 형식의 단서부가적 논법은 I~II장에 이르는 정보사회의 정치 논의 모두에 나타나다가 급기야 정보사회의 정치행태 전반을 근대민주주의 정치의 제조조건에 유보없이 귀속시키는 대단히 과격한 일반화가 이루어진다. 즉, “여기서 언급된 전자민주주의의 조건들은 근대 민주주의의 조건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근대 대의민주주의는 이념적으로는 소규모 단위에서 가능한 (폴리스적) 민주주의가 대중적 기반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적어도 혁신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근대 민주주의의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하며, 전자민주주의론은 근대 민주주의의 지형학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논8)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정보사회적인 양상의 도래로 인해 정치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도 없거니와 더욱 향상될 것도 없다는 예측이 제출된다. “근대의 소산인 사회의 기능적 분화의 결

과 정치체제는 급증하는 정치적 개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나 이미 사회 내의 하나의 하부 체계로 변화한 정치체제가 그것에 대처할 능력은 전자화된 민주주의에 의해서도 본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논9) 그러면서 정보사회의 기술적 가능성들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정보사회의 정치는 단순히 기술적(技術的)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정치적 문제이다.”(논15)라는 궁극적 결론이 도출된다. 즉,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사회변동은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주의의 토양이 단단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한 도약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나 사회전반적인 민주화가 취약한 사회에서는 정치영역에서의 정보화가 역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가능성)

당연히 정호근 선생의 논변은 정보사회의 정치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 모두가 그 기저에 깔고 있는 “기술결정주의”(논14~15)의 오류를 비판하는데 그 역점이 두어져 있다. 그 오류란 “정보통신 매체의 사회적 도입, 즉 정보화 자체나 또는 매체형식 자체가 정치체계 내의 운용에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가 여부의 문제는 매체형식의 변화에서 내용의 변화를 도출하려는 시도처럼 환원론적이 되기 쉬운” 그런 시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실 이 기술결정주의 오류는 사회학 쪽에서 일찍이 지적되어 왔다.(윤영민 1996, 53~56쪽) 그러나 여기에서 정 선생은 기술결정주의의 오류를 피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발제가 전체 표제로 내건 주제와 크게 상반되는 — 암묵적인 — 결론에 별 저항 없이 안착하고 있다. 즉 정호근 선생의 논의가 옳다면, **정보사회에서의 정치에서 변동될 것은 본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할 정도로 자기완결적인 전제구성 위에 움직이는 정 선생의 설득력 있는 <논>증에도 불구하고 평자는 이 논증이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기에는 이 논증의 전제를 구성하는 개별요인들이 정 선생이 설정한 이상으로 복잡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1) 무엇보다 정 선생은 정치현상을 기술결정주의의 구속에서 단절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과도하게 몰입한 나머지 기술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거의 완전히 도외시한 채 기술발전의 귀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반대의 <정치결정주의>에 빠져 들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기술 그 자체가 그 어떤 정치적 결과를 당장에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술은 <인간의 활동능력>과 매개되는 과정에서 우선 그 활동성을, 그 다음으로는 활동의 장을 거의 예측불가능한 방식으로 확장시키고 다변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기술은 그 어떤 형태든 인간관계의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정치활동의 능력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그 다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 선생의 기술논의가 지나치게 도구적인 차원에 한정됨으로써 현재의 정보사회담론을 촉발시킨 계기인 정보통신기술의 질적 특이성을 보다 포착하는 데 시야의 협소함을 조장하고 있다.(기술의 도구주의적 이해) 기술의 역사를 보는 정 선생의 시각은 “인간의 기관의 능력을 보완·대체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서 “이러한 기술의 성격은 인간

의 유기적 구조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유지될 것”(정호근 1997, 346)이라는 정도의 전망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관은 “기술의 성격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나온 생물학적 기관의 연장으로 이해하는”(이태수 1996, 16) 그런 전통적 관념의 반복인데, 문제는 현재 이른바 정보통신기술이라고 가볍게 특화되어 통칭되는 기술의 핵심기술이 이런 전통적 기술관을 거의 혁명적으로 전복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술체계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정보유형이나 기술유형들을 전부 디지털 코드화하는 규정기술(bestimmende Technik)을 통해 인간의 유기적 생명활동이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뛰어넘는 자립적 기술복합체를 구성하는 수준으로 발전한다. 과거의 기술이 “인간 생활의 조건만을 변화”시켰다면, 이 규정기술이 중심이 된 “유전공학, 신경과학, 수명연구, 인공지능 등의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의 발전은 삶의 조건과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특성을 우리 아이들 세대 안에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시키는 수준까지 도달했다.(패프케 1997, 8) 다시 말해서 정보통신기술은 그 자체 단일한 목적의 도구가 아니라 훨씬 복합적인 동조기술군의 한 양상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현단계 기술 발전의 특이한 양상이 정보사회의 문제점에 산업시대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부여한다.

(3)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함의를 논의함에 있어서 정호근 선생의 정치개념은 지나치게 주권국가의 통치기능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술이 이제 막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시점에서 그 기술의 영향력이 가장 먼저 부딪친 <일국주권(一國主權) 민주주의>와의 교착점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제출된 개념이다. 이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아직도 기독교적 중세질서가 압도적이었던 서구 사회에서 우선은 루터 번역 성경의 인쇄 정도에 적용되었던 당시의 정치적 표상이 농민 유토피아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던 상황과 대비된다. 하지만 그 정도로도 중세 봉건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 충분했다. 우리는 지금 정보사회가 막 시작하려는 초입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회를 이끌 기술의 변혁가능성은 우리가 미처 변화를 감지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활세계가 이미 변화된 전지구적 기술복합체의 종속항으로 고스란히 편입되고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完)

참고문헌

- 김영정 1995: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대한 논평”, 한민족철학자대회보, 『인간다운 삶과 철학의 역할』 제1권, 1995, 165~168쪽
라키토프 1996: 『컴퓨터 혁명의 철학』, 이득재 옮김, 문예출판사
문현병 1997: “정보통신 문화와 문화적 주체성의 문제”, 한국철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보, 『문화의 진보와 정보통신기술』, 1997년 5월, 한국철학회

스틀, 클리포드 1996: 『허풍떠는 인터넷』, 한경훈 옮김, 세종서적
 윤영민
 _____ 1996: 『전자정보공간론. 컴퓨터 네트워크의 사회학적 탐색』, 전예원
 _____ 1997: “문명론적 관점에서 본 정보공간”, 『신인문』 창간호, 1997, 한길사
 이초식 1995: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삶”, 한민족철학자대회보, 『인간다운
 삶과 철학의 역할』 제1권, 1995, 139~163쪽
 이태수 1996: “정보화 사회와 인간의 의지”, 『철학과 현실』 1996년 가을호, 「편
 집인의 말」
 정호근 1997: “정보통신 문화와 사회구조의 변화”, 한국철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
 발표대회보, 『문화의 진보와 정보통신기술』, 1997년 5월, 한국철학회,
 341~353쪽
 패프케, 오웬 1997: 『진보의 진화』, 장박원 옮김, 세종연구원
 포스터, 마크 1996: 『뉴미디어의 철학』, 김성기 옮김, 민음사

말과 몸: 정보통신 사회의 삶과 규범

남 경 회 (이화여대)

1. 문제의식
2. 정보통신공간의 구조와 논리
3. 인식과 통신
4. 말의 결과 몸의 결

1. 서론: 문제의식

정보사회의 윤리 규범의 문제는 두 방향에서 논할 수 있다. 우선 한 방향은 정보통신 공간의 발전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 안에서 개인들이 지켜야 할 규범적 문제들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사적 삶의 보호, 개인성의 문제, 음란물의 통제, 폭력적 정보물의 규제 문제, 지적 재산권의 한계, 넘치는 정보와 지식의 올바른 사용문제, 검열문제, 통신 공간에서의 예절 문제 등이다. 또다른 하나는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정보통신 공간이 발전하여 인간의 삶에서 일상화되는 경우, 그것이 인간의 삶의 질서와 규범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의 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인간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의 실체가 말의 질서라 할 경우, 정보통신 공간의 발전이 기존의 규범적 질서에 어떤 변화를, 양적 또는 질적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본고의 주제는 전자보다는 후자이다.

.....
 20세기 후반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세계화, 지구촌화에 따라 새로운 보편성과 획일성의 문화가 등장한 점이다. 정보통신 매체는 지극히 민감하고 수용적인 매체이어서 지극히 작은 변화까지도 전지구상 곳곳에 전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전달의 속도는 광속의 것으로서 지구 끝의 소식을 거의 실시간대로 전달한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 역사 변화의 속도는 급격하고 지구적이며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누구도 소 연방이 어느날 갑자기 붕괴되고, 아시아 경제가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 치리라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제 역사는 마치 아마존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 월(Wall)가의 자본 이동을 일으키는, 카오스 세계의 비선형성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사소한 것을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지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현상은 끊임없는 변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윤리적 정치적 규범이 삶에 주는 안정성은 이제 옛날의 일인 것으로 보인다.

흥미있는 것은 정보화는 정보와 지식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증대는 질서의 창출과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그와는 반대의 현상을 야기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망의 구축 역시 질서체계의 확대와 동조화를 의미함에도 오히려 새로운 혼돈, 자연상태적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세계, 끊임없이 새로이 창출되는 모든 종류의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가 그 전세계적 정보망을 오가는 세계에서 고대, 중세, 근대적 정체성이나 안정성은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정보통신화는 개방성과 유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경쟁의 장을 국제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극한적 경쟁의 시대는 최고의 탁월성 또는 시장성, 기동성과 기회 포착, 끝없는 적응과 변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총체적 변신, 그것도 개인의 단위로가 아니라 전사회적 변신과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필요하다면 대기업에서는 30-50%의 인원을 삭감하고, 국가적으로는 백만, 천만 단위의 고용조정을 감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이다. 모든 변화는 총체적이다. 환율은 한 국가 내 모든 개인들의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시대에는 거시적 분석과 정책, 전망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다. 철학은 본질적으로 거시적이다. 전체에 대한 전망과 근본에 대한 통찰을 항상 목표로 한다. 이런 점에서 21세기는 철학이 보다 중요해 질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현대는 자유주의시대이고,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통하는 것으로 믿어져 왔지만, 이제 이런 도식은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 21세기는 거시 정책, 조직, 집단, 국가적 경쟁, 브랜드,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념, 지적소유권, 등 추상적이고 지적이며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요소들이 힘을 발휘하며, 통계와 수치가 주요 결정의 기준이 될 것이고, 이런 추상성 속에서 개인은 매몰되어 갈 것이 필연적이다. 시장 경쟁은 격화되고 거대화될 것이며, 이 속에서는 이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으므로, 부의 축적은 경쟁적이 되어 간다. 그리하여 단순히 세계적 경쟁에서의 승리 이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는 무한 소유가 경쟁의 목표로 들어선다.

더욱이 정보통신망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그를 통해 급속히 발전하고 확산되어 가는 생명유전공학 지식은 인간과 개인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생태계의 문제는 인위성의 극한인 정보통신과는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 것이지만, 인간 삶과 규범의 문제를 글로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이제 개인의 삶은 국가를 떠나서는, 국가의 삶은 타국과의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성을 떠나서는 논의될 수 없다. 새로운 총체성, 지구적, 인류적 총체성의 시대이다. 우리 한국인은 가까이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 황해의 오염과 황사에 담긴 중금속양을 걱정하고, 멀리는 히말라야 원정대들이 버리는 쓰레기, 아마존 우림의 남벌에 우려를 감출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현상의 핵심에는 정보화와 통신화라는 사태, 그리고 이를 통해 확인되는 지구적 삶의 총체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삶의 질서와 윤리는 삶의 공간이 기본적으로 불변적이고 안정적이어야 정립될 수 있다. 삶의 기본틀이 수시로 바뀐다면 정언명령이나 정의 그 자체, 선의 이데아, 절대 객관적 규범, 신적인 계율, 자체적 선, 보편타당한 정의의 원

리 등이 의미를 상실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인간이고, 우리의 삶이 그저 혼돈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저 흘러가는 것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런 총체적 변혁의 시대는 더욱더 윤리적 모색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윤리는 삶의 기반적이고 총체적인 틀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정신사를 역사적으로 개관하여 보건데, 윤리성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실로 탁월한 윤리이론은 오히려 변화와 혼돈의 시대에 처한 인간의 절실한 요구에서 나왔다. 윤리적 가치와 규범이란 그 어느 때이고, 우리 삶의 항상성과 유의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믿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타당한, 시간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타당한 행위 규칙이 있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구름이나 파도 등과 같은 자연적 현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며, 생존과 번식만을 존재이유로 하는 짐승의 삶과는 다른 면모가 있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 삶의 노력을 포기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대량실업으로 하루 하루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상황, 가혹한 시장논리의 보편적 지배, 국제적 금융자본이라는 추상적 존재, 그리고 그 자본가를 움직이는 무한 욕구와 같은 추상적 관념이 우리의 삶의 공간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망연하게 한다. 그리고 생명유전공학의 발달이 기존의 가족체계, 개인의 정체성, 신체의 존엄성, 인간의 본질 등에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케 하며 전통적 믿음을 붕괴시키고 있는 사태가 현실이지만, 현실이 그러한 고로, 더욱더 윤리적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윤리학은 이전보다 더욱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윤리학의 특색, 그리고 제시되는 윤리체계의 성격은 이전과는 다른 것이 될 것이다.

인간적인 위어나 위엄을 지키며 自尊하고자 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관심, 이것이 인간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것일 것이다. 인간적 삶의 시작은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정치세계, 국가의 구축, 사회계약은 바로 존재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이라는 자연종에 새로운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계약, 국가 구성의 동기이다.¹⁾

2. 정보통신공간의 구조와 논리

정보화와 통신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양자는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지원적이다. 정보화는 통신망의 발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고속의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사회 정보화의 요청이기도 하다. 통신망의 발달은 정보화를 가속화하고, 정보화는 폭넓고 조밀한 통신망의 구축을 자극한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은 광속의 통신망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인의 삶의 질서, 규범정립에 영향을 준다. 통신망의 이런 신속성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지식의 발전을 촉진한다. 정보화는 역사의 단계를 지식사회, 정보사회

1) 다음 참조: 필자, <<이성과 정치존재론>>, 문학과지성사, 1997.

로의 진입케 하고, 통신망의 발전과 확대는 전 세계를 단일하며 동조적인 지구촌으로 만든다. 지나가던 과객의 전문을 통해서 외지의 소식을 전해듣던 시대에서 안방 책상에 앉아 전 지구의 소식을 접하고 타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보와 통신의 관계는 상호적이지만, 우리는 통상의 평가보다는 통신망의 중요성을 좀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현대 사회의 두 측면 중 정보화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더 중요한 것, 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통신망의 발달이다. 물론 퍼스널 컴퓨터 등의 눈부신 발달과 보급이 핵심적 역할을 하기는 하였다. PC는 정보 처리와 축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게 하였다. 하지만 정보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 처리를 필요하게 하는 것은 통신망의 구축이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어도 전달되고 접근할 수 없다면, 그것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조선의 규장각이나 4대 서고에는 엄청난 양의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고대 이집트나 조선시대를 정보화 사회라 부르지는 않는다. 그 당시의 정보나 지식은 만인의 것이 아니라 소수 지식인층, 권력층의 것이었다. 지식과 정보의 제한성 때문에 고대나 조선시대는 그를 독점할 수 있었던 소수층들이 권력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 정보화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정보의 공유가 만인에게 개방되어 가고 있으며, 그리하여 권력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를 가능하게 하는데에서 결정적인 것은 **정보통신망의 발달**이다. PC 없이는 인터넷을 생각할 수 없지만,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통신망, 언어의 **확대된 공동체**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확산에 의한 **지적 민주화, 정보민주화의** 역설적인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보민주화가 되어가는 만큼 새로운 종류의 지식이나 지혜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종류의 귀족주의, 즉 **지식 또는 정보 귀족주의**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제 금융시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도의 정교한 국제적 금융정보와 기법을 소유하고 있는 국제적 금융자본가 집단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금융자본과 정보력을 통해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급격하며 총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의 위력은 우리가 현금의 아시아 경제 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군사력보다 막강하고 예상을 불허하는 것이다.

(1) 우선 고도의 정보화와 정교하고 세계적인 통신망의 구축이 가져올 변화를 짚어보자.

가. 정보화

.....

나. 통신망의 구축

.....

통신망 위에서 구축되는 공동체의 국적 기준은 **화폐와 언어의 공유**이다.

이 두 교환매체가 동일하면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생활 공간이 구성된다. 문화 영역의 측정단위를 말이라 한다면, 경제적 영역의 단위는 화폐일 것이다. 그런데 화폐도 일종의 제도적 언어라는 점에서 주도적인 것은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언어와 화폐, 또는 광의의 언어이건 간에 이를 떠받치는 것은 언어에 대한 신용, 신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중심사회를 **신용중심 사회**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신뢰라는 추상의 가치, 윤리적 덕목이 중요시되는, 그러므로 이들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신용사회, 신뢰중심사회의 전제조건은 정직성, 투명성, 개방성일 것이다. 금본위에서 정보본위로의 이행은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의 이행이라 할 만하다.

.....

(2) 정보통신공간의 구조와 논리

가. 정보통신공간과 언어상태²⁾

정보통신의 공간은 정련된 언어공간이다. 정보통신사회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말들의 질서, 말들의 공동체, 말들의 공간이다. 더 정확히는 언어공간의 특색들이 최대적으로 강화된 공간, 언어공간의 구조와 논리를 정련된 형태로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통신공간은 일상적 언어공간, 또는 의사소통공간에 관여하고 있는 신체성, 지역성 등이 배제되거나 은폐되어 있는 순수히 언어적인 공간이다. 정보인들의 신체는 모니터의 뒤에 숨어 있으며, 그는 오직 언어주체로서만이 통신망에 참여한다. 흔히들 정보통신의 공간을 익명적이라 하지만, 은폐되어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이나 개인성의 정체가 아니라, 그의 신체이다. 그 개인의 정체는 오히려 다른 어느 공간에서보다 더 타자에 노출될 수 있다. 나의 믿음, 내가 구입하는 물건들, 나의 취미, 나의 욕구, 나의 직업, 나의 카드번호, 나의 통장, 내가 연인과 나누는 밀어, 심지어 나의 일기까지도 전파공간에 떠돌 수 있으며, 암호 하나만 알면 나는 백주에 벌거벗은 마음이 되고 만다. 이런 가능성은 언어적 삶을 본질로 하는 인간에게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진정으로 사적인 것이란 없음을 시사한다. **신체의 은폐**는 정보통신공간과 일상적 언어공간 간의 핵심적 차이이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간은 기본적으로 언어공간이다. 정보통신사회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언어공동체이며, 국가는 말의 질서이다.³⁾ 정보사회의 도래는 인간 사회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킨다기보다는 **인간 삶의 본질적 구조를 확연히 드러낸**다는데에 있을 것이다. 근대의 국가론자들은 국가를 자연상태의 극복으로 보았다. 국가를 본질적으로 말의 질서라 할 때, 정보화시대는 자연상태에서 국가에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으로, 역

2) 언어상태의 개념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de Saussure, Ferdinand,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McGraw-Hill, 1966

3) 필자, <<말의 질서와 국가>>, 이화여대출판부, 1997 참조.

설적이지만, 자연과 국가의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자연의 의미를 새로이 새기게 할 것이다.

나. 언어상태는 무시간적 현재성의 공간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언어 공간의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정보통신공간의 구조를 밝히도록 하자. 언어 공간의 구조와 논리는 어떤 것인가? 인식이 나 언어적 기술은 외계의 대상들이 정지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언어적 기술이란 일종의 스냅사진과 같이 흘러가는, 움직이는 대상을 순간적으로 급속 동결시켜 정지된 모습을 포착 기술한다. 언어적 기술문에 담긴 외계의 모습은 사진에 담긴 대상의 모습과 같이 정지상이다. 시간은 언어의 밖에서 흘러간다. 우리가 기술한 사진의 시간을 기술하려 하는 경우에는 사진에 담긴 장면의 밖, 사진의 뒤에 적어넣는다. 시간이나 그 속을 흘러가는 운동 변화하는 대상들은 언어의 사진기로는 찍을 수 없다.

우리는 시간 부사, 과거형 또는 미래형 어미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의 이런 요소들은 언어에서 부차적이고 2차적이며 파생적이다.⁴⁾ 시간 어미나 시간 부사는 언어의 역사에서 후에 등장한 것이라는 사실은 언어의 원형이 무시간적임을 알려준다. 과거는 우리에게 현재하는 바랜 사진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바로 이런 바랜 기억을 매개로 하여 과거의 의식은 생겼을 것이다. 언어적 기술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적 제한사를 붙일 수 없다. 언어의 공간은 비시간적, 초시간적인 현재성의 공간이다. 이것이 파르메니데스나 플라톤의 통찰이었다.⁵⁾ 언어의 시제는 무시간적 현재형이다. 시간사가 없이도 언어가 기능할 수 있음은 우리가 중국어, 호피족의 언어⁶⁾를 생각해 보면 쉽사리 알 수 있다.

언어적 상태는 동류의 타자들, 즉 언어주체들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점에서 동시성의 공간이다. 인간이 거하는 경험의 세계가 시간적 세계이고, 인간은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치며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인간만이 아니라 경험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겪는 근본적인 제약이다.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다른 점은 바로 언어적 능력을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사정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키고서, 이 시간의 축을 가로질러 동시성의 축을 구축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 동시성의 지평은 전통적으로 말하면 추상적 공간, 심적인 공간, 보편의 지평, 초시간적 공간, 유크린 기하학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지평이다. 전통적으로는 이를 사유능력에 의해 근거지웠다. 우리는 그러나 보다 비근하며 명백한 사실에서 이 공간의 데미우르고스, 원장인(原匠人)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언어적 능력이다. 통상적으로 언어의 기능은 타자와의 의사소통이라 하지만, 보다 주요하고 근원적인 기능과 역할은

바로 이 동시성의 공간, 무시간적 현재성의 공간,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 움직이며 변화하는 사태들을 동결시켜 정지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다.

다. 언어상태는 동류의 타자들 간의 평형상태이다.

언어 상태의 주요 특징은 물론 공시적 상태라는 점 이외에, 화자의 신체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변화의 요인들이 유입됨에도 일종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의 요인에 의해 한 언어상태에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어휘들이 유입된다. 그리고 기존의 어휘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맥에서 그리고 새로운 용법으로 사용된다. 평형상태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어휘들, 언어기호들은 도태되어 간다. 현재 언어상태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바로 그 어휘의 의미이다. 항구성을 지니는 본질적 의미란 없다. 통시적으로 타당한 하나의 의미란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언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원리는 현재주의적이다. 언어상태도 하나의 場을 형성하며, 그리고 그 場을 지탱하면서도 흐른다. 화자들은 시간성 속에 존재하는 고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언어상태는 지속적으로 재구축된다. 이런 지속적인 재구축에서 원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평형성의 유지이다.

흐르는 시간을 단절하고 공시적인 차원을 형성해야 타자와의 관계가 가능하여진다. 타자들이 공존함은 윤리적 상태, 정치적 공간의 구축에서 필수적이다. 간단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는 나 주위의 모든 것들, 아니 나 자신까지도 흘러가 과거의 존재, 부재의 존재가 되어 버리므로 타자와의 관계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윤리적 규범의 공간, 정치적 세계는 구축될 수 없다. 타자와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 관계를 통해 타자를 자신과 동류, 동질, 평등한 존재로 만들어 공동체를 구축하게 하는 것, 심적인 공간, 객관의 공간, 의미와 동질성의 공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모두 언어기호, 소쉬르가 말하는 랑그이다.

라. 언어와 존재의 관계

여기서 우리는 언어와 존재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언어는 존재자의 형성, 존재계의 구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 역할을 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통 존재론자들의 언어관은 에텐적 언어관이라 부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어휘들은 사물들의 이름으로서 주관 밖의 객관적 존재자들과의 일대일의 대응적 관계에서 의미를 취득한다. 이런 언어관의 전제는 존재계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초월적이어야 하며, 실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계가 절대 객관적이라면, 그것의 객관성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인식론적으로는 오히려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것은 말하자면 私

4) 소쉬르. <<일반언어학강의>>, McGraw-Hill, 1966.

5) Parmenides의 단편, Plato *Phaedo*, *Politheia* 참조

6) B.E. Whorf,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MIT Press, 1956.

的 언어의 기술 대상이다.

존재의 객관성은 언어주체들 간의, 그리고 언어의 간주관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존재의 객관성이 확보되는 유일한 방도이다. 우리에게 가능한 객관성이란 언어적 객관성이다. 간주관적 존재계의 기초는 언어에 있고, 언어는 인간의 정치성과 본질적인 관계에 있다. 인간이 언어주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과 동류의 인간과 통신하면서 사는 정치적 존재이고, 그 통신의 매체가 언어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인간을 정치적 존재로 만들며, 정치적 관계는 언어를 필수적이게 한다. 그런 고로 언어의존적인 존재계는 정치적 공간이거나 그에 기초한 공간이다. 흔히 사회계약이 국가, 정치공간의 구성계기라 하지만, 그 계약의 역할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계약은 존재계를 전개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존재계가 사회계약, 또는 국가 협약 이후에 전개된다는 점에서 그 협약 이전의 상태로서의 자연상태는 무규정적인 흐름의 세계이다. 언어를 통해서 비로서 그 흐름에 규정성이 가해져 자연은 모습을 갖추게 되며 타자와의 관계가 정립되므로, 존재계가 전개되고 윤리 지평이 확립되는 것은 역시 사회계약 이후이다.

둘째, 무규정적인 흐름인 자연상태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 상태에는 언어가 없기 때문이다. 언어가 없으면 사물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모습이 없는 것은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인식주체인 인간에게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규정성이 없는 것,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비존재이다. 인간에게는 언어적 규정성만이 객관적인 규정성이다. 흔히 감각적 규정성을 논하나, 야수는 몰라도 인간의 경우 감각이 언어의 지원 없이 무엇을 인지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설혹 인지한다해도, 감각으로 인지된 바의 것은 주관적일 것이므로 존재의 모습이 갖추어야 할 객관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셋째, 하나의 세계, 존재계가 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세계 내의 존재자들의 동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둘이상이 존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존재계는 구축될 수 있고, 이런 동시성은 언어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언어의 밖은 간단없는 흐름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존재계의 구축이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존재자들과 존재계는 언어에 의존한다. 고전적 존재론자들이 존재계는 영원의 지평에 있다고 본 이유는 바로 언어의 무시간성, 또는 동시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언어의 공적 성격, 인간의, 언어주체로서의 필연적인 타자지향성, 정치 세계의 구성, 윤리적 지평의 전개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세계에 있어 언어가 결정적인 인간의 필연이다.

마. 언어 가동의 논리와 조건

언어의 무시간성, 또는 동시성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언어적 진화의 소산이고, 언어주체는 시간을 사는 생명체이다. 언어 주체인 인간은 시간을 살며, 생

노병사를 겪으며 시간의 제약 하에 있는 존재이다. 당연히 그의 언어도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인간과 언어가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가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과거의 단절, 망각이다. 그 이유는 어휘들의 의미는, 예텐적 언어관을 견지하지 않는 한, 한 동시성 또는 현재성의 체계 내에서 그리고 타자와 관계하며 타자와의 차이를 통해 정체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언어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철저히 단절해야 하며, 단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언어상태의 정언적 논리이다.

과거는 우리 자신의 현재가 되어 있는 한에서만 그 언어공간에 참여한다. 과거를 현재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은 기억기제이고, 기억은 규정적 내용이 있어야 하므로 언어의존적이다. 이런 연관성은 과거의 의식, 시간의 의식이라는 것도 언어에 의존한다는 추정을 하게 한다. 시간의 흐름은 언어에 의해 정지되는 것이나, 정지될 그 시간에 대한 의식마저 언어가 있어야 가능하다. 언어 이전에는 정지되어야 할 시간조차 없었다.

윤리적 담론의 장은 언어상태 속에서,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윤리적 규범들은 나의 과거나 언어상태 밖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어느 것과의 관계에 의해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현재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윤리학의 역사는 그런 동시성, 과거, 시간성의 부정, 공동체 밖의 존재에 대한 부정의 역사이었다. 맹목의 운명, 필연, 이데아계, 신의 명령, 선형적 실천 이성, 절대 정신, 역사의 법칙, 직관적 이성, 등의 개념들은 이제 유효성을 상실한다.

도덕은 누적된 과거를 바탕으로 하는 진화의 소산이기는 하지만, 언어상태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도덕상태의 현재성 속에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도덕의 진화를 운위할 수 있는 것도 실은 도덕상태가 있기 때문이다. 도덕상태가 구축이 되어야 도덕이나 도덕의 진화를 논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도덕을 유전자의 행태로 환원하려는 사회생물학이나 고대의 계층간의 갈등에서 그 연원을 찾으려는 니이체의 계보학적 입장은⁷⁾ 방향정위가 잘못되었다.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간 삶의 공시적 측면은 점점더 강화된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삶에서 언어의 영향력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점점더 언어상태적이 된다.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간이 노는 언어게임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그 게임의 규칙은 좀더 복잡해지면, 중층적인 것이 된다. 개미가 개미탑을 짓기 전에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나, 그 탑이 단단해지면 질수록 그 속에 갇히는 것과 같이, 인간도 역사가 진행되면서 언어의 단단하고 복잡하기가 미로⁸⁾와 같은 언어의 감옥⁹⁾에 갇힌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인간의 신체나 질병, 자연까지도 동시성의 영역에 편입되

7) 푸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8)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 참조.

9)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와 도시의 비유 참조.

고, 그의 논리에 의해 규정된다. 언어와 문화의 논리가 단단한 실재로 여겨지는 신체나 자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동서 간의 확연한 차이에서, 고대 호머시대에까지도 신체의 개념이 없었다는 사실, 단발령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 나아가 현대의 다이어트 신드롬이나 결핵, 에이즈,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변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질병의 사회학을 논할 수 있다. 우리의 신체관이나 질병관, 건강관은 언어의 동시성의 영역에 편입되어 논의되는 신체, 질병, 건강이다.

바, 정보통신공간의 특성.

3. 인식과 통신: 언어는 더듬이이다.

언어는 매체가 아니라 주체이다. 리바이어던이다.¹⁰⁾ 언어는 단순한 매체를 넘어서 전달할 내용 자체를 창출하는 매체이다. 그런 점에서 원매체, 원장인과 같다. 언어 이전에는 내용이 없었다. 최초로 언어가 사용될 때에는 물론 내용도, 그러므로 형식도 없었다. 최초의 언어는 동시에 형식이자 내용이었으며, 매체이자 전달 내용이었다. 마치 강의 시원에는 강물과 강상의 구분이 없었듯이.

언어는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 언어가 우리의 삶에 총체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계기는 인식과 통신의 연속성, 인식기관과 통신매체의 일치이다. 동물들의 경우, 세계의 인지능력과 동일 자연중 내에서의 상호간의 통신 능력은 상이하하다. 꿀벌은 후각으로 꿀의 존재를 인지하지만, 그 꿀의 소재지를 다른 벌들에게 알릴 때에는 벌춤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한다.¹¹⁾ 개미도 더듬이를 통해 외계를 인지하지만, 통신은 특유의 몸짓에 의한다. 새들은 후각이나 전파를 이용하여 외계를 인지하지만, 서로간의 의사소통은 소리를 이용한다. 곤충이나 동물의 경우,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수단은 판이하게 다르다.

일상인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경우도 그러하다고 믿는다. 외계의 인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감각들이나 이성이고, 자신의 의사나 외계의 모습들 전달하는 통신의 수단은 언어라는 것이다. 언어는 세계를 기술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틀리지는 않으나, 피상적이고, 언어가 인간의 삶에 끼치는 힘의 깊이를 가늠하지 못한 결과이다.

인간의 인식 매체와 통신 매체는 상호 동조화되어 있다. 인식의 전형이 명제적 인식이라는 사실에서 보듯이 인식은 언어의 옷을 입어야 그 내용이 명확한 규정성을 지니며, 객관성을 위한 조건을 구비하게 된다. 인간 간의 통신 수

10) 필자의 위의 저서, 제 1부 리바이어던인 언어 참조.

11) 다음 참조: 하트, 스티븐, 『동물의 언어』, 1996. (이용철 역, 김영사); R. G. Millikan, *Language, Thought, and Other Biological Categories*, The MIT Pr., 1984.

단이 언어라는 사실은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언어는 인식된 바를 전달하는 통신의 매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수단이기도 한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계의 모습을 더듬는다는 점에서 언어는 우리의 더듬이이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언어를 통해 표현하며, 타인의 말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우리의 언어적 능력을 동원하여 그의 속마음을 독해한다.

언어의 시초에 아마도 언어는 인간의 통신의 능력에 불과했을 것이다. 즉 인간의 인지능력과 통신능력은 상이한 것으로, 상호 양자는 분리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의식 또는 사유질료의 분절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분절화에 따른 언어의 발달은 인간의 외계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주고, 인간은 분절적인 그물망으로 세계를 보게 되었을 것이다. 타고난 생물학적 인지능력인 감각은 정제되거나, 언어능력의 발달과 함께 오히려 퇴화되고, 그런 만큼 더욱더 통신의 능력인 언어능력은 인간의 삶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심화해 나간다. 발전하는 언어능력은 새로운 인지능력인 이성을 발전시킨다. 이성은 말의 공동체에서 개방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말들의 결이다. 우리는 이런 이성관을 언어적 이성이라 이름할 수 있다. 이성의 어머니는 말이다.

언어는 인간의 기초적 인지능력인 감각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한다. 한자적 사고는 視와 見, 聽과 聞을 구분하고 있다. ¹²⁾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언어적 인지의 개입 여부이다. 아마도 언어 이전의 인간의 감각들은 동물들의 그것과 같이, 인식 또는 인지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 단지 외계의 자극에 대해 어떤 행태를 유발하는 반응의 기제였을 것이다. 그것이 '인지한' 바는 전혀 분절되어 있지 않았다. 분절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제공하는 동시성의 지평에서 내용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동물에게는 외계에 대한 표상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외계의 모습은 동물의 내부에 머물지 않는다. 그 모습이 머물 수 있는 동시성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공간이 없으므로 외부 세계의 자극은 모습의 양태로 형성되지 않는다. 흔히들 동물들이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 외계와 직접성의 관계에 있다고들 말한다. 이 말은 바로 동물의 내부에는 외계의 모습이 형성될 동시성의 지평이 부재함을, 그러므로 이 모습에 의한 매개적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원래는 통신능력이었던 언어능력이 인지능력을 장악함으로써, 감각까지도 언어의 결제를 받고서야 자신이 인지한 바를 주체에 보고할 수 있다. 사태의 보다 정확한 기술은 다음이다. 언어의 개입에 의해 감각적 지각은 단지 반응 기제에 머물지 않고, 비로서 인지능력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때에야 비로서 지각은 규정적인 지각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지각내용을 지닌다는 말은, 지각한 바가 공시적인 언어상태에서 재규정된다는 것을, 자리매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視之而弗見 聽之而弗聞. 中庸, 16절

칸트는 인간의 인식이 시간과 공간, 12범주 등 선형적 형식에 의해 제약된다 논한 바 있다. 그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인식에 선형적인 요소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입장을 부분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는 칸트가 말하는 바, 지각의 형식으로서의 공간을 공시적 언어상태로 재해석하여 그의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과 함께 공간이 지각의 선형적 형식이라는 말을, 인간에게 있어 지각은 동물의 경우와 달리, 공시적 언어상태를 거쳐 인지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감성적 지각의 선형적 형식으로서의 공간이란, 진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또는 취득된 언어상태의 동시성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인간의 감각이 시공의 제약을 받는다는 말은 통신의 기제가 인지의 기제를 장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공시적 언어상태가 필수적이다. 이 의사소통의 공간이 지니는 논리적 특성, 객관성의 지평, 동질성의 조건, 동시성 등의 특성이 그 공간의 구성원들이 외계를 인지하는 형식까지도 변화시킨다. 칸트는 감성의 능력과 오성의 능력, 즉 판단의 능력을 엄격히 구분하였으나, 이제 우리의 논의에 따르면, 양자는 연속적이다. 언어능력의 발달과 함께 통신망이나 통신의 매체가 인간의 인지능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결과 감성은 오성의 장악 하에 놓이게 된다.

인식 매체와 통신 매체의 동조화는 필연적이다. 이런 동조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인식공간과 통신의 공간은 별개로 따로 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식은 객관성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우연적으로만 사회적 의미를 지닐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한, 인식은 우리의 삶에 기여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의 삶은 單棲性의 삶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단서적인 삶에서는 고급의 인식, 더 근원적으로는 인간적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간의 인식만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다움까지도 타자와의 정치관계에서 형성된다. 인간이 정치적 존재라는 사실의 한 중요한 함의는, 단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한다, 경제적 협동의 이익을 분배한다, 공동의 방어를 한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더 근원적으로 그의 정치성이 그의 인식의 방식과, 그로 하여 그의 삶의 방식을 제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통신공간이 인식공간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우리의 의사소통의 공간, 사회적 삶은 외계에 대한 인식과는 오직 우연적인 관계만을 맺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허공의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삶은 불가능한 삶이고, 사실과도 다르다. 인간은 타인들과 함께 사는 공존재적인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타자들, 자연 속의 사물들에 둘러싸여 자연의 일부로 사는 신체적 존재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인식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인식은 일차적으로 외계의 인식이다. 외계의 인식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회적이라 한다면, 외계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적 공간, 통신망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는 통신의 공간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입증되어야 비로써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인간의 인식은 외계지향성과 사회적 객관성 또는 소통가능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언어의 규정력: 언어가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언어의 규정성 때문이다. 인간은 언어적으로 규정된 것만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데칼트가 제안한 확실성의 이념은 의미가 있다. 단 우리는 그 확실성을 코기토의 확실성이 아니라 문장, 언어의 확실성으로 대체해야 한다. 언어적 확실성의 취득은 동시에 동물적 확실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언어적인 확실성은 직각적이고 자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확실성, 즉 타인과의 합의를 통해 확보되는, 타인과의 합의가 강하고 폭넓으면 넓을수록 그 정도가 높아지는 그런 양적인 확실성이다. 확실성의 근거는 언어의 공적 규정성이다.

통신영역에 의한 인지영역의 장악, 그리고 통신망의 발달은 한 공동체 구성원 개체들의 생존방식을 상당히 변화시킨다. 그 변화는 존재론적인 것이다. 종 내적인 통신수단의 발달은 종 고유의 자율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영역은 그 종의 존재방식에 있어 핵심적이다. 바로 여기에 통신수단의 존재론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동물에는 단서성 동물과 군서성 동물이 있다고 한다. 전자는 교접시를 제외하고는 주로 홀로 사는 동물들이다. 늑대, 두더지, 나비들이 그 예이다. 군서성 동물은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서 그 사회의 성원으로 살아가는 개미와 같은 동물이다. 개미의 경우, 그 종 내의 개체들의 존재이유나 목적은 통신수단에 의해 연결된 집단 전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들은 집단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발달된 통신 수단은 개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보다는 그의 집단예속성을 높인다. 그러나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 할수록, 군집이나 종의 결집력은 높아지며, 자연계로부터의 독립성도 높아진다. 그리하여 그 군집이나 종은 발달된 통신수단에 의해 자율적인 삶의 공간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단서성의 자연종 개체들은 자연상태의 주어진 생물학적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군서성의 동물들은 통신수단에 의해 공동체를 구축하며, 이 공동체가 다시 개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속하며, 이 전체의 일부로서 살아간다. 이 점에서 이들의 생존 환경은 자연조건에 더하여 공동체의 종 내적이고 자율적 영역이라는 두겹의 현실에 의해 제약된다. 이 후자의 영역은 그들로 하여금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넘어서게 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어쩌면 이들은 타인들과 언어로 통신하면서부터 공동체라는 초개체의 일부가 되어간다고 볼 수도 있다. 군서성의 동물은 단서성의 동물과는 생존의 방식을 질적으로 달리 하는 자연 종이다. 후자의 경우, 개체는 독립적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개체는 전체의 일부가 됨으로써만이 독립적 개체일 수 있다.

통신수단인 언어는 인간의 생존방식을 완전히 변모시킨다. 언어를 습득한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 가령 늑대소년을 비교해 보자. 이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이 알려주는 바는, 언어를 통한 통신의 활동은 한 개체가 타 개체나 언어공동체에 대해 자신의 의사나 인식의 결과를 전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수동적

활동, 언어공동체로부터 영향력을 수용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 과정은 자신의 의사와 인식을 전달하면서 타인이나 자신보다 더 큰 주체인 언어공동체의 승인을 받고, 더불어 그것의 의사와 인식을 수용하여, 자신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타인과 대화하고 통신하면서 자신을 형성해간다. **통신활동에서 주체는 타자인 언어공동체이다.** 개인이 주체일 수 있다 해도, 주체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으려면, 언어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전체에 통용되는 원리와 논리는 그 부분에 통용되는 원리나 논리보다 지배적이다.

4. 말의 결과 몸의 결: 21세기의 규범 원리

윤리학의 역사를 잠시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윤리 규범의 근거는 신성, 초월성, 선형성, 내재성에서 찾는 것이 주류적인 것이었다. 아니면 인간의 이성, 특수한 위치를 부여하여 윤리적 이성, 보편적 이성, 실천 이성, 기하학적 이성의 존재를 논하였다. 이런 이성은 인간 본성의 핵심으로서 인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보편타당한 윤리규범과 가치들을 발견하게 하여 줄 것이며, 이런 규범들과 가치들은 인간의 지위를 자연적 존재 이상의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논하여 왔다. 인간이라는 자연종은 신체를 지니고 있으며, 자연 진화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성은 인간을 자연세계에서 부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전통의 윤리적 믿음이었다. 동양적 사유에서도 대체적으로 인간은 자연적 존재 이상에게 하는 어떤 인성, 천도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

인간이 자연적 존재 이상의 존재이며 인간이 이성적 존재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윤리적 탐구란 그런 믿음의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에서만, 그리고 인간 특유의 인지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 이상이므로 학적인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성은 학적 탐구의 주체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인간적 삶의 윤리적 기초를 위해 전통적으로 제시되어 오던 개념들을 계속 고수할 수는 없다. 윤리성의 근거를 초월성, 신성, 선형성, 내재성 등에서 구하려는 모든 시도는 윤리적인 것을 주관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학적 탐구의 필수조건인 객관성과 공적 성격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윤리의 복권, 인간적 삶의 복위를 위해 전통의 개념에 기대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떨치고, **윤리의 비신비화**를 좀더 진행해야 한다. 이제 정의의 그 자체, 선의 이데아, 율법, 정관적 삶, 정언명령, 선의지, 인격성, 공리, 행복, 실존, 신성불가침의 개인성 등의 원시적 어휘들은 폐기하거나 그 의미를 재규정하거나, 또는 적어도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들의 개념들은 시대의 소임을 다 하였다.

이런 비신비화에 대응하는 다른 쪽의 극한은 윤리성의 기반을 '인간의 본성에 관한 사실'로 간주되는 소위 심리적 이기심과 이를 위해 최대한 봉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타산적 또는 도구적 이성에 기초지우는 것이다. 이런 방향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로 우리는 롤즈, 노직, 고티에 등을 들 수 있다.¹³⁾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지에 관해 필자는 극히 회의적이며, 더욱이 그것이 배타적이고 원자적인 이기심이라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더 근원적으로 필자는 사실이라는 개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사실이라는 개념은 근대 이후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¹⁴⁾ 근대 서구의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것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라는 것은 타파되어야 할 또다른 종류의 신화, 근대의 신화이다.

타산적 이성의 개념은 어떠한가? 일상의 삶에서 타산적 이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특수성의 굴레 속으로 밀어넣는다. 타산적 이성이란, 화폐와 같이, 시장과 같은 공유의 지평이 설정이 된 후에, 그 지평을 배경이나 좌표로 해서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것은 그런 일차적인, 일반성의 지평이 구축된 연후에야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일차적 특수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능이다. 그것은 일차성의 지평이 없는 허공에서는 기능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타산, 계산의 행위란 연속적이고 동질적인 지평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단일 통화권이 형성이 되어야 화폐가 통용이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 일차적 지평, 공유의 좌표대를 국가나 윤리적 지평, 좀더 가까이는 이의 지원을 받는 시장이라 한다면, 타산적 이성 자체는 윤리성의 기반을 마련해주기보다는 그 기반이 형성된 연후에야 가동될 수 있는 기능이다. 타산적 이성이란 본질적으로 원자적이고 배타적인 특수화의 원리인 고로 결코 국가나 윤리적 지평의 일차성, 일반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¹⁵⁾

그러면 윤리성의 기반을 우리는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윤리적 탐구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자명한 사실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인간이 말하는 존재, **언어적 주체**라는 사실이다. 이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자명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인간은 언어로 세계를 인지하며, 세계의 모습을 구축한다. 나아가 언어로 타 언어주체의 내면을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심적 세계를 형성함으로써 타인과의 심적인 유대를 갖는다. 심적인 유대란 나와 타인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장들은 믿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적인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13) J. Rawls, *A Theory of Justice*, Oxford Univ. Pr. 1972.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서광사, 1986)

R.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1974. (남경희 역,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문학과학사, 1984)

D. Gauthier, *Morals by Agreement*, Oxford U.Pr., 1986. (김형철 역, <<합의도덕론>>, 철학과학현실사, 1996)

14) A. MacIntyre, *After Virtue*, 제 7장, Notre Dame Univ. Pr., 1981.

15) 타산적 이성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필자의 다음 저서 참조: <<이성과 정치존재론>>, 문학과학사, 1998.

우리는 서로를 싫어하건 좋아하건 타인과 내적인 유대를 맺고 있다. 사랑과 증오의 전제조건이 바로 그런 내적인 유대, 내적인 유사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들과 의사소통을 행하며, 그리함으로써 공적이고 객관적 세계를 구축하여, 그 세계를 자신의 생존공간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공간의 형성은 의사소통을 통해, 그리고 의미있는 문장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회란 의미들의 공간이다. 의미들은 간주관적이고 공적인 공간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객관적이고 공적인 의미의 매개가 없으면, 타인과의 유대, 의사소통, 공동체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의미란 타인과 언어게임을 하며, 타인의 문장들을 해석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창출되는 존재이다. 의미들의 체계, 이는 소쉬르가 말하는 랑그일 수 있다.

사회란 필연적으로 내적인 공간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한대로, 신체만을 접하고 있는 공간의 공동체나, 경제적 협동만을 위한 돼지들의 국가가 아니다. 공간의 공유, 경제적 협동, 상호 권리의 보호 등도 분명 국가 공동체의 주요 기능의 하나이지만, 이 기능의 선행적 조건은 언어와 믿음의 공유, 내적 유대의 형성, 의미공간의 형성이 선행적이라는 것이다. 그런 계기나 목적마저도 언어와 믿음의 공유, 정의와 판단의 일치¹⁶⁾, 믿음들의 전반적 공유¹⁷⁾를 전제로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성은 이런 언어적 활동, 의사소통, 언어게임, 해석의 결과이다.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사유를 하고, 사유의 활동을 하므로 언어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성, 사유, 언어의 존재론적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언어적 활동은 심적 세계의 형성과 전개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성이란 한 언어공동체에서 오가는 말들의 총체적 결이다. 언어란 선행하는 사유활동의 표현이 아니라, 그 전제조건이다. 사유의 섬세함, 정교함, 그리고 객관성은 언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성이란 신의 선물이라거나 선행적이거나 내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항상 한 언어공동체에서 오가는 말들의 질서, 언어 공동체의 모든 언어주체들의 말들이 모여 이룬 전체의 결, 그 결서가 평형성이나 조화를 이룬 상태의 모습, 그리고 이런 총체적 무늬나 결을 인지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이런 결을 말들의 결, 또는 사회적 이성이라 부르기로 하자.

결이란, 바람결, 물결, 나무결 등이 그러하듯이 중간적인 존재이다. 서로 다른 매질의 흐름이 서로 만나 부딪치게 될 때, 이 두 흐름은 양자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어떤 중간적인 존재로서의 결을 만들어 낸다. 이 결은 두 질서가 서로간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다시 말하면 서로 간의 유속이나 흐름의 방식 등에서 유사성을 최대화하여 서로 조화와 평형을 이루고, 그리하여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중간적이고 매개적인 질서이다. 또는 그런 평형성을 찾으려는 인간의 능력이나 성향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

16)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 by G. E. M. Anscombe, Macmillan Pub.co., 1953.

17) D. Davidson,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Clarendon Pr., Oxford, 1984.

성을 이런 주위 타자와의 총체적 조화와 평형성을 찾으려는 능력으로 재규정해 볼 수 있다.

결과 분절화는 두 흐름의 존재를, 그리고 양자의 갈등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파도의 예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파도라는 분절적인 결은 물의 흐름과 그 위를 스치는 바람의 흐름이 부딪쳐 만드는 것이다. 양자의 속도나 질감은 다르며, 이런 차이에서 생기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은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 언어의 두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은 사유내용과 분절된 음성이다. 애초에 이들은 질료적이었을 것이다. 이 원초의 사유질료와 음성질료의 두 흐름은 서로 만나면서 서로를 분절시켰을 것인데, 이 분절화는 결의 양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의 삶은 정치체 안에서 영위된다. 정치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말의 공동체이다. 그런 한에서 그 언어공동체 내의 말의 결은 그 공동체에 거하는 개인들의 삶과 규범을 위한 원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 말의 결, 사회적 이성은 그 내용이 선행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교류에 따라 사후적으로 총체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현대의 정보통신사회는 공동체의 경계를 연성화하고 있으며, 그 공동체의 크기나 구성원을 수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과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체는 수시로 수축될 것이며, 한 개인은 다수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물론 그 개인이 따라야 하는 결들은 교차하고 중복되면서 복잡한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과거와 타 공동체의 문화가 유입됨에 따라 기존의 결은 새로이 무늬를 짜기도 할 것이다.

각 개인들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 문장들의 총체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무늬, 결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믿음과 문장들의 총체적 결이 그 개인들의 자아상이다. 이 결은 그 많은 믿음과 문장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결은 일종의 합리성으로서(일관성, 개방성, 지향성) 그들을 공존케 하는 원리요, 공존을 위한 기준이기도 하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믿음이나 문장들은 속아내어지거나 조정됨으로써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의 결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개인들의 마음결은 타인들의 마음결, 말결과 만나 다시 또하나의 결을 형성해 낸다. 그것을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결, 사회적, 정치적 이성이라 말할 수 있다. 각 개인들의 결들이 서로 부딪쳐 과도한 마찰을 일으키며 파열음을 낼 경우, 하나의 조화로운 사회의 결은 생겨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공동체 내의 말의 결 또는 정치적 삶의 결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세계의 흐름 사이에서도 우리는 또다른 종류의 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결을 생태학적 결 또는 생태학적 이성이란 말로서 개념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⁸⁾ 여타 동물의 경우와는 달리, 인간은 자연 진화의 소산이고, 신체적 존재로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자연상태를 벗어나 자신들의 질서를 구축한다. 이것이 국가, 정치상태이고, 이 상태에서의 질서는

18)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 'Gyul: Ecological Reason', 유네스코 2차 APPEND 회의 발표 논문, 98년 5월.

위에서 논한 바 말의 질서이다. 이 질서에서 이성적인 것은 말의 결이라는 모습을 지닌다. 근대 국가론자들이 논하듯이 국가란 일차적으로는 자연상태의 문제점을 극복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면, 국가라는 정치상태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는 갈등할 가능성을 원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국가를 구성하게 한 자연 법(Natural Law)은 자연의 법칙들(laws of nature)과는 달리 자연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인간을 위해 신이 선사한 신적인 법칙이고, 나아가 초자연적인 법칙이다. 서구적 사고는 자연을 인간의 공유물로 신이 하사하였다는 확신에 의해 그들의 자연 정복, 자연 착취를 정당화한다. 그런 고로, 인간의 질서와 갈등하는 자연 질서는 이성에 의해 인간에게 종속적인 것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술문명의 본질이다.

분명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자연 질서의 일부로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인간 고유의 질서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그 질서는 우리가 말의 질서, 말의 결이라 칭하는 바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인간이 자연 진화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더 근원적으로 인간이 신체를 지닌 존재로서 자연상태를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자연을 자신의 삶의 세계로 삼아야 함은 필연적이다. 서구의 국가론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우리는 영원히 자연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자연상태는 우리 삶의 세계의 일부 또는 기초를 구성하고 있다. 국가를 구성하게 한 자연법은 아마도 자연 질서, 자연의 법칙들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운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도 칸트나 뉴턴 이래도 많은 자연과학자들이 믿어 왔듯이, 선형적 필연성을 지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총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 수정하며 형성되어 가는 결과 같은 것일 것이다. 자연의 질서는 새로운 것의 유입에 관대하며, 이 새 요소를 수용하여 전체적으로 평형상태를 구축해 간다. 그리고 여하히 하더라도 평형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체와 같이, 자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교란 요인들은 걸러내어 도태시킨다. 우리는 말의 질서와 결과는 달리, 인간의 신체를 포함한 자연의 질서와 결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연의 결은 총체적 질서로서 일종의 조화와 평형을 이루고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평형이 유지되어야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이질적 질서가 등장하여 이 자연의 질서 또는 평형을 교란시키려 할 경우, 이 두 질서 사이에 갈등은 필연적일 것이다. 자연이라는 전체성은 부분보다 크고 지배적이다. 전체의 질서나 흐름은 부분의 질서나 흐름보다 강할 것이다. 전체는 부분보다 강하다. 인간의 자연 속에 구축한 말의 질서와 결은 자연을 질서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인간은 자연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만이 자신의 삶의 질서, 말의 결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적 삶의 질서과 결이 자연의 그것과 동일할 수는 없다. 인간은 결코 식물이나 야수들과 같이 자연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 그런 고로 인

간적 질서와 자연적 질서와의 갈등과 마찰을 불가피하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협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수 있는 최선은 말의 결과 자연의 결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 달리 말하면 말의 결과 몸의 결 사이의 합치점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말의 결, 인간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 그 지점에서 삶의 결을 형성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마치 한 정치공동체에서 개인들은 타 개인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또는 합의점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말의 결, 즉 사회적 이성을 형성해 가야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삶의 규범을 삶의 결이라 부를 수 있다. 삶의 결이라는 것은 파도와 같이 두 흐름, 즉 말의 결과 자연의 결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이 양자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파도와 같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두 흐름은 물의 흐름과 공기의 흐름과 같이 만나 물결을 이루어 내며, 이와 함께 서로를 분절시켜 나간다. 그 결과 인간 삶의 결(倫理, 理)이 형성되며, 외계에도 질서가 생겨난다. 이 자연의 결은 자연자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파악한, 인간의 관점에서 인식된 자연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래야 할 것이다.¹⁹⁾ 삶의 결 또는 질서는 외계 속에서 그리고 타인과 살아야 하는 인간의 삶을 최적적인 상태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다. 인간의 문화와 자연의 질서 간의 갈등이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삶의 결은 생겨나야 하는 것이다.

한문의 理는 옥의 결을 의미한다. 옥의 결이나 나무의 결은 자체의 구성요소나 조직이 외적 환경과 만나면서 형성한 중간적 질서이다. 이는 말하자면 두 흐름 사이에서, 서로를 분절시키며 생겨나는 질서이다. 우리는 이성을 이런 결의 개념으로, 동양적 理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결이란 모든 두 흐름 사이에서, 그 두 흐름이 서로 질서를 지니고 있기에 생겨나는, 그리고 그 마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적적인 상태에서 서로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질서이다. 두 질서의 조화와 공존은 서로의 분절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동양적 文理의 개념이나 한국어의 결 개념이 근현대의 규범적 질서를 이한 축을 제공해 왔던 서구적 계약적 합리성, 타산적 합리성의 개념을 대체할 것을 기대해 본다.

아마도 한문의 理보다는 한국어의 결이라는 개념²⁰⁾이 보다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개념일 것이다. 우리 한국적 사고는 옥이나 나무에만이 아니라 살, 숨, 물, 돌 등 가시적이거나 경험적인 것만이 아니라 말이나, 생각, 마음에도 결이 있다고 생각한다. 말의 결, 생각의 결, 마음의 결에 더하여, 우리는 나아

19) 자연의 모습은 흔히 믿어지는 바와는 달리 선재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항상 새로이 구축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발견의 대상이 아니라 구축의 대상일 지 모른다.

20) 한국어의 결 개념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글들 참조: 1) <<말의 질서와 국가>>, 이화여대출판부, 1997, 제 2 부 말의 결과 객관질서; 2) <보편국가의 이념과 신인문주의>, 철학연구회편, <<근대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 철학과 현실사, 1998 소재; 3) 위의 'Gyul: Ecological Reason'.

가 보다 총체적인 것으로서 삶의 결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결이라는 개념은 서구의 이성개념보다 강력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전체의 일자성과 개인의 다수성, 또는 전자의 보편성과 후자의 특수성을 조화시키면서도 전체의 총체성과 조화를 융합하고 있는 개념이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 결은 획일적인 하나의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두 질서의 마찰을 전제하며, 2) 선험적인 또는 선재하는 기준을 상정하지 않고 오히려 질서의 원리가 상호 다른 질서의 조정 조화에 의해 하나의 무늬를 형성함에서 비롯한다는 결과주의적 또는 사후적이고 민주적 원리에 부합한다. (다수결 원리에도 부합한다) 3) 두 서로 다른 질서는 공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총체적인 질서를 만들어낸다, 4) 그리고 그 질서는 조화로움과 공존, 평형을 특징으로 한다, 5) 나아가 이는 중간적이고 파생적인 질서이기는 하나 기존의 것보다는 상위 차원의 것이고 보다 포괄적이다.

말과 마음과 삶의 결은 물결과 같이 개방적이고 자기 수정적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언어의 주체인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란 구조적으로 사회적이고 타인지향적이다. 하여 끊임없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문장들과 믿음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결을 만들어간다. 사회란 무수히 많은 결들이 평형을 이루며 교차하고 중첩하면서 또다른 새로운 그리고 총체적인 결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규범의 당위력이나 강제력은 말의 힘에 의존한다.²¹⁾ 윤리 규범과 정치규범은 연속적이고, 후자가 더 근본적이다. 규범은 삶의 틀이다. 사실과 당위를 구분함은 정당하지 않다. 규범들은, 윤리적인 것이건 정치적인 것이건 간에, 국가의 구성적 사실이다. 게임의 규칙이 게임의 장을, 문법과 용법이 언어공동체를 구성하듯이, 이 규범들은 공동체의 틀을 구성하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규범 일반 특히 윤리 규범은 기층적이고, 공고하며, 일상적이며, 삶의 제도이다.²²⁾

정보통신사회는 말들의 질서, 말들의 공동체이다. 정보통신사회는 인간의 삶에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그런 것들이 가하는 제약을 최소화한다는 데에 중요한 특징이 있을 것이다. 피, 땅, 국경, 금, 실물과 같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언어와 화폐와 같은 추상적 요소가 주도하는 사회가 현대 사회이다. 화폐도 일종의 제도적 언어라는 점에서 주도적인 것은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회의 이성은 말들의 결이다. 이 말에는 물론 객관성과 공적인 성격을 지닌 모든 믿음, 의견, 정보, 지식 등이 포함될 것이다. 21세기의 윤리적 규범은 이런 말들의 결을 원리로 기준으로 해서 정립될 것이다.

21세기에 대한 이런 일반적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새로운 세기에서의 삶의 방식과 규범질서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한다.

(1) 이중의 총체성: 통신망과 생태계

정보사회는 위에서 논한 바 전형적인 언어상태이다. 이 상태의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의 질서에 깊이 연루되어 있어 체계, 타자 연관적이 된다. 전통과 역사로부터는 점차 단절되면서 현재성의 윤리가 지배적이 될 것이다. 영원성의 윤리에서 시중적(時中的) 윤리로 이행해 간다. 전 지구적 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세계는 하나의 윤리적 좌표대를 구축할 것이다. 통신망의 발달과 정보화는 인간을 자연상태에서 멀어지게 하는 측면이 있으나, 역설적으로 그런 만큼 자연친화적 윤리가 요청된다. 신체를 통한 자연과의 관계가 재정위될 것이며, 생태학적인 요인들이 인간의 규범적 질서의 정립에 결정적인 고려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2) 이원화: 필연적으로 인간 삶의 이원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규범체계 역시 이원화할 것이다. 규범체계는 지구적 규범과 지극히 사적이고 지역적인 규범체계로 이원화되어 갈 것이다. 개인들의 삶은 동시에 거대 규범, 실로 전인류적 규범과 미시적이고 거의 사적인 규범에 의해 규제될 것이다.

근대까지 공동체 구성의 필수 요건은 시간과 공간의 공유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매체로 하여 구축되는 공동체는 비대면적, 익명적인 공동체이다. 더 정확히는 이 공간에서는 이름과 얼굴이라기보다는 신체가 철저히 은폐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사회가 발전하고 진화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은 소집단모임을 그리워하고 자연과 신체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강화된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는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자아와 신체에 대한 배려를 위한 시간적 재정적 여유를 제공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인간 삶의 이원화를 진행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추세이다.

현대인은 언어적 주체로서는 지구적인 존재임에 비해, 신체적 존재로서는 지방적인 존재, 공간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존재이다. 정보인, 지식인으로서 사는 공간은 지구촌이지만, 신체적이고 정서적 존재로서 사는 공간은 촌락, 지역사회, 또는 도시외곽의 주택단지, 교외나 산골의 전원주택이다. 신체의 용량이 변함 없는 한, 개인들이 접하고자 하는 대면 집단의 크기는 촌락공동체에서나 지구공동체에서나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교통의 발달, 교류의 빈번함에 의해 확대될 여지는 있으나, 원격지인과의 접촉은 주변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이전에 개인은 하나의 공동체에만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개인은 동시에 정신과 육신의 주체로서 행동하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이제 차원이 다른 등위적인 2개의 공동체에 소속된다. 그의 국적인 이제 2개가 되는 것이다. 정보인, 지식인으로서 전지구적 통신공간에 소속되고, 신체적 존재로서는 촌락적 공동체에 소속된다. 칸트는 우리가 목적의 왕국의 시민이면서 사물의 왕국의 신민이라 했지만, 이제 우리의 소속은 언어의 왕국과 자연의 왕국이다. 그리고 양 왕국의 관계는 칸트의 경우와는 달리,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요구하며, 그 소속은 칸트의 국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3) 흑자는 전자 민주주의의 도래를 점친다. 즉 전 국민들이 전자통신망을

21) 필자, 위의 저서, 1부 리바이어던인 언어.

22) 필자, 위의 저서, 제 11장 참조.

통해 의사소통하며 회랍시대의 직접민주주의를 재현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런 예측과는 반대로 정보통신사회는 오히려 전자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다.²³⁾ 사이버공간의 발달은 신체적 접촉이 가능한 친밀한 공간에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지방자치를 발달시킬 것이다. 작은 지역공동체의 자치는 통신망을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면적 관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정치가 삶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으며 2차적이고 도구적 의미만 지니는 근대 현대와는 달리, 이런 대면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 정치는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회랍적 폴리스의 이상이 부활할 것이다.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지면 질수록, 아고라의 중요성, 대면사회 속에서의 대면적 접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21세기의 사회는 더 이상 지방자치에 의해 정치 윤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현대는 새로운 총체성의 시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요구하는 글로벌한 문제들이 대두되는 시대이다. 이 시대의, 이 시대 윤리성의 특징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제기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들이 등장한다는 데에 있다. 이런 문제들은 지방자치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들은 지역사회들을 생활공간으로 하는 일상적 개인들의 차원에서는 숙고 결정될 수 없는 것들이다. 21세기에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신성불가침의 원자적 권리를 지닌 개인들이 아니라, 지구상 생태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연종들의 하나인 인류라는 자연종의 일원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지구적 거대 규범들의 정립이나 전인류적 윤리 문제의 해결은 국가 윤리위원회나 국제적 협의 기구를 통해서 철학자, 현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환경의 문제, 자연과의 공존의 문제, 유전자 복제 승인 여부, 안락사, 죽음의 기준, 개인성의 기준, 장기매매, 등 생명유전공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런 인류적 문제들의 예가 될 것이다.

(4) 윤리 규범과 정치 규범의 연속성: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윤리적 문제가 전인류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사적 인생관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큰 틀은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국제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개인의 인생관이나 세계관도 그 범위 내에서만 정립되고 추구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철학과 윤리학은 同延的이다.

인지와 통신의 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는 것은 타인과 통신하는 바라고 한다면, 정보통신사회에서 개인의 자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다. 통신공간이 삶의 공간이 되고, 그 공간에서 오가는 정보는 인간의 내면 형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며, 그의 행위 규범은 그 공간의 논리와 윤리에 맞추어 결정될 것이다. 마스크를 통해 광고되고 힘을 키운 국제적인 브랜드들의 파워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정서를 어루만지며 그 내용의 형성에 심중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맥루한의 말대로 멧세지는 맛사지이다. 통신을 통해 전

해 받는 정보는 인간의 삶, 신체적 생존, 자연에 대한 견해에까지 영향을 준다. 타자의 의견은 개인의 삶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정보통신망은 개인이 접촉하는 타인의 범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한다.

(5) 생명유전학의 발전은 눈부시다. 이제 윤리적 문제의 스케일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20세기에 들어서 철학자들에게 윤리학은 기피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해결이 나지도 않고, 인생관, 행위규범, 가치관 등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이제 유전학과 유전공학의 발전은 가공할, 적어도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못하던 사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정체성과 개인의 기준에 관해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뇌없는 올챙이의 등장, 유전자 복제, 원숭이끼리의 두뇌 이식, 냉동인간, 정자 은행, 실험관 아기의 일반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문제, 장기매매라는 노예제보다 더 철저한 신체의 매매 행위, 안락사의 문제, 등.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이런 유전공학의 발전과 그 지식의 확산 응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생명유전공학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전인류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이제까지 방치되어 왔던 인간의 문제, 윤리의 문제들을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일상적 삶의 중심으로 이끌어 들여 논쟁의 대상으로 삼게 하고 있으며, 할 것이다. 이제 인간이 무엇이나, 개인의 기준이 무엇이나는 문제는 단지 종교인, 철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철학적인 논쟁의 시대가 될 지도 모른다.

23) 나아가 정보통신사회의 발달, 특히 정보화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보, 지식귀족주의를 등장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